

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6-03

# 친환경농업 정부정책 기반 대응 전략

Strategies Based on Government Policies  
for Eco-Friendly Agriculture in Jeonbuk State

배균기 이병훈



##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 연구진 소개

### 배균기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이병훈

고려대학교 식품·보건경제학 석사  
전북연구원 연구원

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6-03

# 친환경농업 정부정책 기반 대응 전략

Strategies Based on Government Policies  
for Eco-Friendly Agriculture in Jeonbuk State

배균기 이병훈



##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

연구 책임 배균기 | 책임연구위원 | 제1장, 2장 1·2절, 3장 3절, 4장

공동 연구 이병훈 | 연구원 | 제2장 3·4절, 3장 1·2절

---

자문위원 유희빈 | 전북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박종구 | 전북친환경농업협회 이사

안난희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재생유기농업실장

최규환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농업생태실장

최명일 | 순창군 친환경농업팀장

장현욱 |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 이사

---

연구관리 코드 : 25JU3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연구 목적 및 방법

### ■ 연구목적

-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전북자치도의 종합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정책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방향과 추진전략, 중점과제 마련

### ■ 연구방법

- 친환경농업 관련 문헌조사, 친환경농산물 생산·인증 및 유통·소비 등 통계자료 분석
- 전북자치도 제6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운영, 친환경농업 분야별 주요 관계자·전문가 자문회의 추가 진행을 통한 정책평가 및 중점과제 등 도출

## 2. 결론 및 정책제언

### ■ 정책목표

- (비전) 생산부터 소비까지 지속가능 친환경농업 생태계 구축
  - 환경과 조화 등 지속가능 농업을 중시하는 농정 전환 방향에 지역이 추구해온 현장 중심의 가치를 결합
  - 친환경농산물 면적 확대를 기반으로 생산-소비 전 과정에 대한 경쟁력 강화, 정책추진 구조 개선 추진
  - 수요 기반의 건강·안전한 공급체계 확대, 농업환경 보존과 지역 순환체계를 통한 통합적인 생태계 구축
- (목표) 친환경농업 면적 확대와 농업환경 보전 목표 설정
  -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인증 면적 확대(유기/무농약) : ('24) 1.5/1.1% → ('30) 3.0/2.2%
  -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 ('24) 248.1kg/ha → ('30) 241.7kg/ha
  - 친환경농산물 공공(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률 확대 : ('24) 62.8% → ('30) 71.4%

### ■ 추진전략

- (친환경농업 생산 역량 강화) 친환경농업 직불금 확대를 통한 소득보전 강화, 환경친화형 자재 지원을 통한 생산비 부담 경감, 친환경농업 규모화 및 조직화 전문단지 조

성, 신규 농가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지원

- (수요 기반 유통·소비 구조 개선)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통한 안정적 수요처 확대, 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도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조달체계 구축, 소비자 교육 및 교류 활동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인식 제고
- (친환경 인증 안전성 강화) 친환경 및 저탄소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를 통한 신뢰 제고
- (농업환경 순환체계 구축) 농업환경 보전 지원체계 확대,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 가축분뇨 자원화 및 경축순환 활성화

## ■ 중점과제

### 1. 친환경농업 생산역량 강화

농가소득 보전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생산비 절감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 벼 생산관리 지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집적화 단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쌀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쌀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특성화농업지구 지정
전문인력 육성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	·친환경농업인대회 지원

### 2. 수요 기반 유통·소비 구조 개선

공공수요 확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쌀 소비 촉진 지원	·친환경쌀 어린이급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공급체계 개선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지원
수요 기반 확대	·친환경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	·소비자 교육 및 교류 활동 강화
홍보·마케팅 강화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 ·저탄소농산물 홍보 판촉 지원	·친환경유기농 박람회 참가

### 3. 친환경 인증 안전성 강화

인증 고도화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 지원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안전성 강화	·공공급식 농수산물 안전관리 지원	·중소농 농산물 안전 지원

### 4. 농업환경 순환체계 구축

농업환경 보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노지 스마트팜 및 정밀농업 시범사업	·농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확대
친환경 기술 보급	·미생물 농자재 생산 및 보급 확대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 및 보급
탄소중립 실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자원순환 체계	·농업부산물 자원화 및 영농폐기물 관리 강화	·가축분뇨 자원화 및 경축순환 활성화

# 차 례

## CONTENTS

---

요 약 ..... i

---

###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5

---

### 제2장 친환경농업 정책 및 여건 분석

1.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방향 ..... 11

2. 전북자치도 친환경농업 정책 ..... 23

3.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인증 현황 ..... 28

4.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 현황 ..... 40

---

### 제3장 전북자치도 친환경농업 현황 진단

1. 조사개요 ..... 53

2. 조사결과 ..... 55

    가. 생산 및 인증 분야 ..... 55

    나. 유통 및 소비 분야 ..... 59

    다. 환경농업 분야 ..... 63

    라. 지원체계 분야 ..... 65

3. 소결 및 시사점 ..... 70

---

**제4장      전북자치도 친환경농업 대응 전략**

1. 정책목표 ..... 75

2. 추진전략 ..... 78

3. 중점과제 ..... 84

    가. 친환경농업 생산 역량 강화 ..... 84

    나. 수요 기반 유통 및 소비 개선 ..... 88

    다. 친환경 인증 및 안전성 강화 ..... 92

    라. 농업환경 및 순환체계 구축 ..... 93

**참고문헌** ..... 98

## 표 차례

### LIST OF TABLES

---

[표 2-1] 친환경농업 정책구조 변화 .....	11
[표 2-2] 친환경농업 정책의 흐름과 주요 내용 .....	12
[표 2-3]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추진방향 .....	14
[표 2-4] 전라북도 제5차 농업환경보전 실천 5개년 계획 .....	25
[표 2-5] 전북자치도 정책과 정부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비교 .....	26
[표 2-6]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 현황 .....	28
[표 2-7]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현황 .....	29
[표 2-8] 친환경농산물 호당 인증 면적 현황 .....	30
[표 2-9]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현황 .....	31
[표 2-10] 친환경농산물 호당 출하량 현황 .....	32
[표 2-11]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성 현황 .....	33
[표 2-12] 친환경농산물 부류별 출하량 현황 .....	34
[표 2-13]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현황 .....	35
[표 2-14]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현황 .....	36
[표 2-15]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호당 인증 면적 현황 .....	37
[표 2-16]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출하량 현황 .....	38
[표 2-17]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호당 인증 출하량 현황 .....	39
[표 2-18] 2023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출하처 .....	40
[표 2-19] 2024년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수취율 .....	41
[표 2-20] 2024년 출하경로별 생산자수취율 .....	41
[표 2-21]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수취율 .....	42
[표 2-22] 2023년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구매처 .....	42
[표 2-23] 2023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소비자 구매처 .....	43
[표 2-24] 2023년 학교급식 학교 현황 .....	44

[표 2-25] 2023년 학교급식 학생 수 현황 .....	44
[표 2-26]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 .....	45
[표 2-27]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학교 유형별 급식 농산물 지출 금액 현황	46
[표 2-28]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학교급식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 .....	47
[표 2-29]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학교급식 농산물 지출 금액 현황 .....	48
[표 4-1] 전북자치도 친환경농업 대응 전략 .....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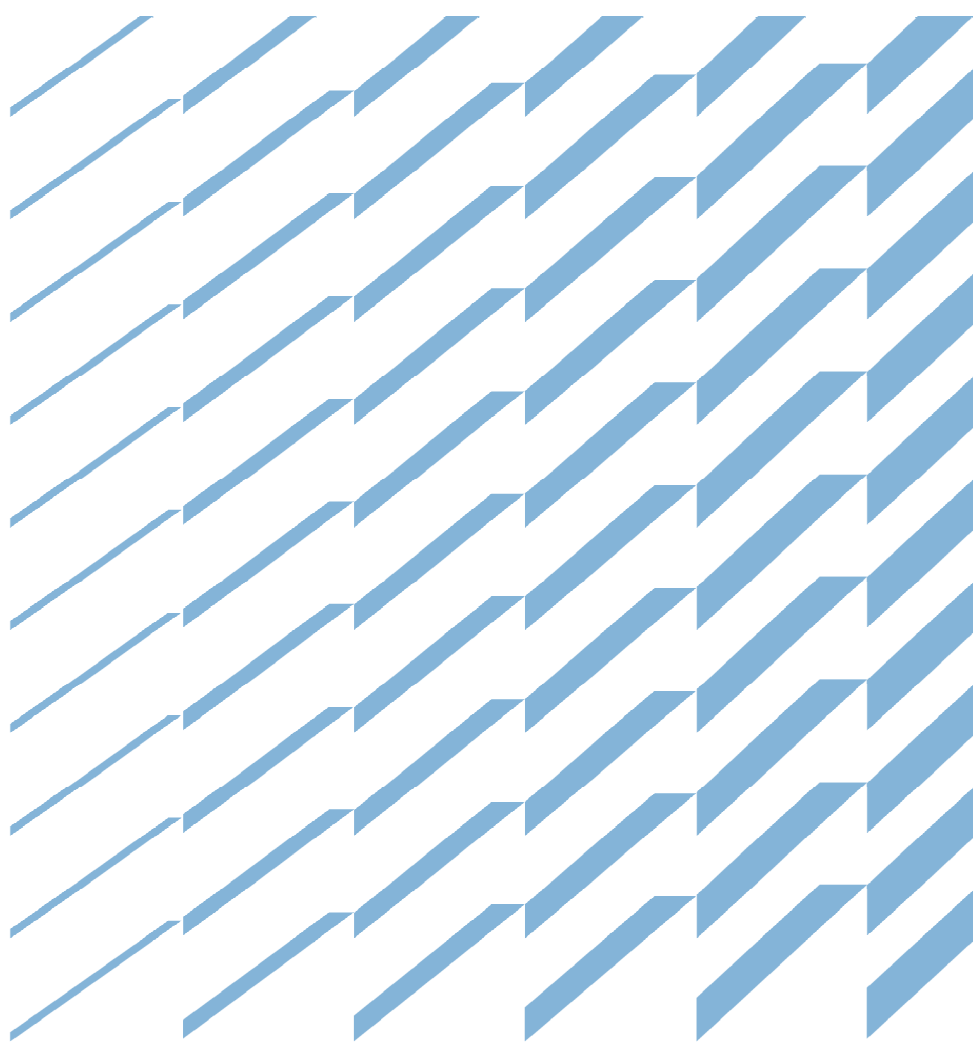
## 그림 차례

### LIST OF FIGURES

---

[그림 2-1]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지도 .....	49
[그림 2-2] 최근(1년 이내) 친환경농산물 구매경험 .....	49
[그림 2-3] 2024년 국내산 및 수입산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	50
[그림 2-4] 2024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	50





# 제 1 장

##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제1장 연구개요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가. 연구 배경

- 친환경농업은 탄소중립 농업을 실천하는 수단이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반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천농가의 감소 등 관련 여건은 취약해지고 있는 현실임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양적 확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증 현황과 관련 산업은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농식품부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026~2030) 계획을 수립 중이며, 기존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 변화가 예상됨
  - 1ha당 화학비료 사용량은 2020년 266kg에서 2025년 233kg, 농약 사용량은 10.5kg에서 9.5kg로 저감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5.2%에서 10%까지 향상시키는 등 정책목표 제시
  - 화학비료 사용량은 2023년 242kg으로 감소세지만 농약은 2023년 12.7kg으로 증가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2024년 4.5%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계획이행 점검 의무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제고, 소비자 인식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경우 최종 생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보다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등 인증시스템 및 생산·판매 지원체계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됨
  - 계획 수립 이후 이행 점검에 대한 부재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성과목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업직불금 개선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소득제고 방안 등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전북자치도는 5차 실천계획에서 '생태환경 보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 농산물 소비 확대, 생태농업 확산기반 구축 중심의 정책을 추진
  -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내실화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지구 육성, 새만금 농업용지의 친환경·유기농 농업 집적지구 개발,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 수요에 기반한 품목 다양화 지원 등 추진
  -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푸드플랜을 중심으로 학교·공공급식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유기농복합서비스 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소비 확대, 소비자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
  - 생태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화학비료 중심의 관행농업을 개선하여 친환경·GAP·저탄소 농산물 인증과 연계를 확대하고, 가축분뇨 등 농촌환경 유해 요소를 재활용한 선순환 구조 조성, 직불금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 전북자치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은 농가수의 경우 전국의 감소세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거나 출하량은 가파르게 감소하여 친환경농업 유지 및 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됨
  - 2023년 기준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수는 3,571호, 면적은 5,008ha, 출하량은 23,962톤 수준으로 최근 5년 동안 농가수 -14.8%, 면적 -12.3%, 출하량 -29.9% 등 전 분야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무농약 인증농가는 29.6% 감소한 반면에 유기 인증농가는 17.2% 증가하였으나 출하량은 29.6% 감소하여 전국의 0.7%에 비해 큰 차이를 보임

## 나. 연구목적

-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전북자치도의 종합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정책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농정 차원의 추진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임

---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가. 주요 연구 내용

#### 1) 친환경농업 여건분석 및 현황진단

##### ■ 전북자치도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분석

-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을 중심으로 전국과 전북자치도를 비교분석
- 인증농가, 인증면적, 출하계획량,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부류별(곡류/채소류/과실류/두류/서류/약용작물/특용작물), 시·군별 현황 등 주요 특성 분석

##### ■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 현황 분석

- 선행연구자료를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실태, 소비행태 등 내용 검토
-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 시장에 대한 주요 이슈와 트렌드 변화 등 분석

##### ■ 친환경농업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 농림축산식품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수립 관련 추진동향 및 주요내용 검토
- 정부의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 및 제도, 타 지역에서 추진하는 관련 계획 및 정책사업 등 분석

##### ■ 전북자치도 친환경농업 정책여건 종합진단

- 친환경농업 생산, 유통 및 소비 현황, 관련 제도 및 정책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단

#### 2) 친환경농업 육성 방향

##### ■ 정책평가 및 기본방향

- 전북자치도 제5차(21~25)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대한 종합평가

- 
- 친환경농업 생산, 유통·소비, 기술·교육 등 분야별 문제점 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 ■ 기본방향

-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 ■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업 정책의 중장기 목표 설정
- 생산기반 확대, 농산물 소비 확대, 생태농업 확산기반 구축 등 추진전략

### 3)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 현재 추진 중인 정책지원에 대한 개선, 신규 정책 등 지원방안 정리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 유통 및 소비 활성화, 기술·교육 지원체계 등 고려

## 나. 연구 방법

### 1)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 ■ 문헌조사

- 친환경농업 관련 선행연구, 연구보고서, 정책자료 등 문헌 검토
- 친환경농업 관련 법률 및 조례, 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 등 자료분석

#### ■ 통계분석

-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 분석

- 농림어업조사, 농업법인조사, 농가경영체 등록정보, 농산물소득조사 등 통계자료 분석

## 2) 전문가 자문방법

### ■ '전북특별자치도 제6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 및 연계 추진

- 「친환경농어업육성법(제8조)」에 지방자치단체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 의견수렴 과정을 명시
- 행정(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지원기관(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농협,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민간단체(전북친환경농업협회, 전북영양교사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0여명 내외 구성
- 제5차('21~'25)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대한 종합평가 및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
- 제6차('26~'30)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방향 및 정부정책 대응전략 등 논의

### ■ 전문가 자문회의

- 친환경농업 주요 기관·단체 관계자, 관련 분야 연구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회의 진행
- 친환경농업 여건분석을 통한 전북자치도의 대응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등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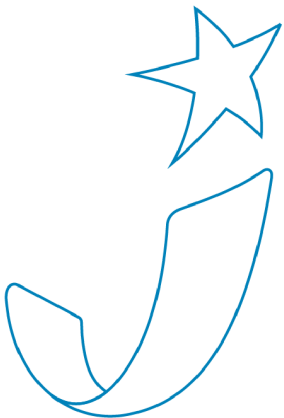




## 제 2 장

### 친환경농업 정책 및 여건 분석

1.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방향
2. 전북자치도 친환경농업 정책
3. 친환경농산물 생산·인증 현황
4.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현황





## 제2장 친환경농업 정책 및 여건 분석

### 1.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방향

#### 가. 정책구조 변화

- 이재명 정부는 68번 국정과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의 실행과제로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방향을 발표
-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기본이념으로 화학농자재 투입 감축과 토양 건강성 증진, 생물다양성 보전, 탄소 감축·격리 등 농업환경 보전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

[표 2-1] 친환경농업 정책구조 변화

구분	5차 계획	6차 계획
기본이념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범위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 농업환경 보전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직불 개편 계획 수립</li> <li>○ 집적지구 통한 생산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불금을 국정과제 이행계획과 연계 체계적으로 확대</li> <li>○ 집적지구 확대 및 고도화</li> <li>○ 유기자재 및 인력 지원 확대</li> </ul>
유통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급식 확대 검토</li> <li>○ 오프라인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급식 중심으로 실수요 확대 (임산부지원사업, 친환경쌀 공공비축 등)</li> <li>○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확대</li> </ul>
인증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정중심 인증제도 시범도입 검토(집적지구 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정 중심 인증 제도 개선</li> <li>○ 친환경-저탄소 인증 연계 및 인증마크 체계 개선</li> </ul>
농업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 관리체계 부재</li> <li>○ 토양검정 기반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 요소별 관리계획 수립·점검 (농지, 수질, 생태계, 탄소, 가축분뇨 등)</li> <li>○ 토양검정실 운영기반 확충 및 공익직불 시비처방 확대</li> <li>○ 미생물 농자재 활성화</li> </ul>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농식품부 중심 평가</li> <li>○ (환류) 일방적 보완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부·지방정부 공동평가</li> <li>○ 정부·민간 협의 및 정책 조정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신설)</li> <li>○ 정부·지자체 협의 통한 제도개선 (중앙·지방정부 정책협의체 구성)</li> </ul>

자료 :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5)

[표 2-2] 친환경농업 정책의 흐름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차, '01~'05	인증제와 직불제 도입, 토양검정 및 농업환경변동조사 체계 확립,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 등 초기 기반 조성
제2차, '06~'10	저농약인증제 폐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및 물류센터 등 기반 구축, 흙토람(농업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제3차, '11~'15	친환경농업단지·지구 조성, 직불제 확대개편, 친환경 유통·소비채널 확대 등을 통해 생산소비 활성화 여건 조성
제4차, '16~'20	친환경 의무자조금 및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 폐지, 광역 산지유통조직 육성 등 지원
제5차, '21~'25	과정 중심 인증제도 도입, 친환경농업집적지구 확대,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및 지급상한 확대

자료 :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5)

## 나. 추진 방향 및 목표

### 1) 추진방향

- 농식품부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026~2030) 계획을 통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비전으로 설정
- 정책목표인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농업환경 보전 지속 추진 등 2대 분야에 따른 8대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
- 농식품부, 지자체, 농진청, 민간단체 등 친환경농업 제 주체의 역할분담을 통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을 강조
  - 농식품부: 친환경직불·자재지원으로 생산기반 확충, 과정 중심 인증제도 강화, 공공수요 확대(임산부 지원, 녹색제품 지정, 공공비축)
  - 지자체: 정부와 목표 공유 및 공동 점검·관리, 전략작물 및 인증면적 목표 설정
  - 농진청: 토양검정 기반 확대, 화학비료·농약 적정 사용 교육 및 기술 개발·보급
  - 친환경단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역할 강화

## 2) 정책목표

- 친환경농업의 생산·소비 기반을 확충하여 성장세로 전환시키고,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유기 인증 면적을 2배 이상 확대 목표를 제시
  - (제5차 계획 목표) 1ha당 화학비료 사용량은 2020년 266kg에서 2025년 233kg, 농약 사용량은 10.5kg에서 9.5kg로 저감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5.2%에서 10%까지 향상시키는 목표 제시
  - (제5차 계획 평가) 화학비료 사용량은 2023년 242kg으로 감소세지만 농약은 2023년 12.7kg으로 증가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2024년 4.5%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 (유기·무농약 면적비율) ('24) 경지면적의 2.5%, 2% → ('30p) 5%, 4%
  - 친환경농업직불 확대로 농가 소득보전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기반을 확충하여 유기, 무농약 면적 2배 확대 추진
  - 인증면적이 가장 넓은 쌀을 전략작물로 설정, 지자체와 공동으로 목표 관리 및 공공비축을 통해 친환경 쌀 재배 확대(~'30, 73천ha)
- (화학비료 사용량) ('24) 233kg/ha → ('30p) 227kg/ha
  - 토양검정·시비처방 확대, 비료판매 정보와 시비처방 정보 연계, 농업인 홍보·교육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 (합성농약 사용량) ('24) 10.0kg/ha → ('30p) 9.0kg/ha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직불제 전환, 미생물 농약 보급 등을 통해 관행농가를 저투입 농법으로 유도
- (중장기 목표) 2050년까지 친환경농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
  - 유기 인증면적 : ('24) 총 경지면적의 2.5%(37.6천ha) → ('50p) 20%
  - 화학비료 사용량 : ('24) 233kg/ha → ('50p) 199kg/ha
  - 합성농약 사용량 : ('24) 10.0kg/ha → ('50p) 농약 위험도 관리 체계로 전환

[표 2-3]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추진방향

비전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인증 면적을 2배로 확대 * 총 경지면적 대비 유기/무농약 면적 비율: ('24) 2.5%, 2% → ('30) 5%, 4% ◇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화학비료 및 농약 감축 * 화학비료: ('24) 233kg/ha → ('30) 227kg/ha * 합성농약: ('24) 10.0kg/ha → ('30) 9.0kg/ha		
2대 분야 추진 전략	친환경 유기농 2배 확대	가. 생산 기반 확충	① 친환경농업직불 확대 ② 유기농업자재지원 확대 ③ 친환경농업 집적화 및 품목별 조직화 ④ 친환경 농지 보장성 강화 ⑤ 인력 지원 확대 및 재배기술 교육·보급
		나. 수요 기반 확대	① 친환경농산물 공공수요 확대 ②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센티브 ③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소비활성화 ④ 친환경 자조금 역할 확대 ⑤ 친환경농업 환경가치 인식 제고 ⑥ 소비자 교육 강화
		다. 유통 구조 개선	① 유통 및 판매망 확충 ②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 ③ 국제협력 강화 ④ 친환경 생산·유통 통계 구축
		라. 과정 중심 인증제도로 개선	① 과정 중심의 인증제도 강화 ② 인증마크 체계 개선 ③ 친환경-저탄소 인증 연계 ④ 유기농업자재 제도개선 ⑤ 인증기관 육성
	농업 환경 보전 지속 추진	가. 농지 및 수질 보전	① 농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확대 ② 노지 스마트팜 및 정밀농업 확산 ③ 농업용수 수질 관리 강화 ④ 농업환경변동조사 확대·개편
		나. 생태계 보전	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개편 ② 미생물 농자재 생산보급 확대 ③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보급
		다. 탄소 감축	① 저탄소 농업 유인체계 구축 ② 저탄소 농업 기술 개발·보급
		라. 영농폐기물 및 가축분뇨 관리	① 농업부산물 자원화 및 영농폐기물 관리 강화 ② 가축분뇨 자원화 및 경축순환 활성화
추진체계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및 관계기관 정책 협의회		

자료 :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5)

## 다. 세부 추진계획

### 1)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 ■ 생산 기반 확충

##### ○ 친환경농업직불 확대

- 정책목표 : 친환경농가 소득보전 강화(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친환경직불 단가 인상)
- 적정단가 검토 : 밭·과수 단가 8년째 동결('18~) 개선, 논 단가 적정수준 확보로 친환경 벼 재배 활성화
- 지급횟수 완화 : 필지별 지급횟수 제한기준 완화('26),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27)으로 신규 농가 진입 및 유기전환 장려
- 신청 편의성 개선 : 온라인 친환경직불 신청 시스템 도입, 시설재배 최소 기준 현실화 등 추진
- 관련 제도 정비 : 임산물 특성 고려, 기존 제도에서 친환경임업직불제(산림청) 분리 추진

##### ○ 유기농업자재지원 확대

- 정책목표 : 유기농업자재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가의 수익성 개선
- 지원 확대 : 인증면적 증가(+38천ha) 대비 유기농업자재 지원 규모 확대, 친환경농가 우선 지원으로 농가당 지원 규모 인상(유기)무농약(일반)
- 유기농업자재 매뉴얼 : 신규 친환경농가를 위한 안전 자재 중심 표준 매뉴얼 제작·보급('26)
- 인증 전환 관리: 3년 이상 지원 관행농가 대상 친환경농업 교육 이수 및 인증전환 계획서 제출 의무화
- 친환경퇴비 지원 : 산림부산물 활용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확대 ('25) 6개소 → ('30) 10개소
- 유기종자 육성 : 수입 녹비작물 대체 국산 채종기술 개발 및 생산체계 확립, 권역별 증식포 운영

##### ○ 친환경농업 집적화 및 품목별 조직화

- 정책목표 : 친환경 집적지구 인증 전환율 ('25) 84% → ('30) 95%
- 집적지구 지정 :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유통 컨설팅 등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확산, '청년 지구' 신설 및 인증면적·매출액 차등 기준 적용, 노지 스마트팜 기술 도입 컨설팅 지원
- 인증비율 제고 : 지자체 자율적 인증 전환 목표율 설정, 관행→무농약→유기 단계적 전환 유도

- 환경 관리 : 환경 평가 지표 개발, 전국 5개소 시범측정으로 환경개선 효과 평가
- 품목 조직화 : 전국 단위 품목별 규모화·조직화, 계약재배 및 공동 마케팅 연계
- 친환경 농지 보장성 강화 및 청년농 지원 강화
  - 비의도적 오염 최소화와 친환경 농지 보존 등을 위한 농지 보장성 강화 : 친환경단지 내 일반농지 농지 은행 매입 후 친환경농가 공급, 은퇴농의 친환경 농지 승계 농업인 대상 인센티브, 청년농 진입 장려
  - 친환경농업 '특성화농업지구' 지정('26~) : 농지 임대차 허용, 관련 사업(유기농업자재지원 등) 혜택
  -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유기농업단지 조성('28), 친환경 공공농지 확대를 통해 친환경 공급기반 확대
- 인력 지원 확대 및 재배기술 교육·보급
  - 인력공급의 원활한 중계를 위한 정부, 도·농 지자체, 민간 기관 참여 협의회 운영('26)
  -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 청년·후계농 대상 지역 밀착형 1대1 멘토링, 세미나 지원('26)
  - 교육체계 개선 : 성장 단계별 교육·훈련 수요 파악('26), 교육기관 역할분담 및 교과과정 개편('27)
  - 농기계 R&D : 발작물 5종 기계화 재배 실증 연구, 파종·정식·수확 기계 개발(~'27) 지원

## ■ 수요 기반 확대

- 친환경농산물 공공수요 확대
  - 정책목표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진('26~),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30) 및 친환경농산물 녹색제품 지정, 친환경 쌀 재배면적 확대 ('24) 35천ha → ('30) 73천ha
  - 소비 확대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정부 지원 재개, 어린이집·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 녹색 제품 지정 및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먹거리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사용 실태조사
  - 친환경 쌀 재배면적 ('24) 35천ha → ('30) 73천ha, 공공비축 매입 확대하여 취약계층 복지용 공급
  - 영양교사 교육 : 품위 기준 개편, 단체급식 식단 개발, 친환경 농장 팜투어 확대('26~)
-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센티브
  - 조사연구 : 가격 부담 완화 수단 국내외 사례 조사('26), 지역화폐 현금 등 방안 검토
  - 정책·제도화 :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중심 정책·제도 구체화('27), 조세제도 개선 협력

- 생산자 교류 지원 : 소비자-농업인 교류 프로그램 운영, 생산 현장 방문 등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소비활성화
  - 홍보 : 친환경농산물 사용 식당 발굴 확산 및 홍보 지원사업 추진
  - 메뉴 개발 및 보급 : 외식업체 등 대상 친환경 신메뉴 개발보급 확대
  - 외식업 지원사업 활용 : 쌀 등 주요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대체 시 외식 관련 사업 연계 지원
- 친환경 자조금 역할 확대
  - 정책목표 : 친환경 자조금 역할 확대(~30) 및 친환경농산물 신수요 창출
  - 사업구조 개편 : 가공·유통·수출 분야로 회원대상 확대, 이중거출 명확한 납부기준 제시
  - 유통 활성화 및 신수요 창출: 온·오프라인 채널 다양화, TV홈쇼핑·직매장·편의점 판로 확대, 가공산업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친환경농업 환경가치 인식 제고
  - 전략 수립 : 인구구조 및 농산물 구매 행태 변화 대응한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홍보전략 마련('26)
  - 맞춤형 홍보 : 소비자별 특성 및 이용매체를 고려한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소비자 교육 강화
  - 전문인력 육성 : 친환경농업 전문강사 500명 양성, 시범 운영('26) 후 인력은행 관리
  - 교육지원 : 대상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지자체·소비자단체·영양사협회 등 제공 및 활용 지원
  - 미래세대 교육 : 초중등 대상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재·영상 개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확대

## ■ 유통 구조 개선

-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판매망 확충
  - 정책목표 : 온라인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친환경농산물 전용코너 설치('27)
  - 유통망 확대 : 소비자 접근성과 구매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도매시장, 대형마트 전용코너, 직거래 등 활성화
  - 물류 인프라 확충 : 물류비 절감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전용 거점물류센터 건립(~'30)

- 경쟁력 제고 : 민간 유통조직 애로사항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검토('26)
-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
  - 정책목표 : 국내 유기가공식품 산업규모 연평균 10% 이상 성장, 수출 유망상품 발굴 및 육성
  - 기반조성 : 분야별 전문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협업생태계 조성
  - 규제개선 : 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애로사항 파악, 규제사항 발굴·개선
  - 수요처 발굴 : 학교급식·단체급식, 수출 판로 개척 등 유기 가공식품의 신규 수요처 발굴
  - 조사·연구 : 유기가공식품 산업현황, 소비실태 등 정보조사 및 품질향상을 위한 R&D 추진
- 친환경 생산·유통 통계 구축
  - 매년 갱신되는 친환경인증의 특성을 활용, 친환경인증정보 관리시스템 단계적 개선
  - 친환경농업에 특화된 재해보험 상품 도입을 위한 기초 통계 구축
- 국제협력 강화
  - 국제규범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체결국 간 지속 교류, 국제기준 신설 등 제도적 협력 강화
  - 기술협력 : 재생유기·기후스마트 농업 분야까지 교류를 확대, 기술 분야 공동 연구개발 기반 마련
  - 네트워크 : 글로벌 친환경농업 관계자들과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형성, 공동 발전 기반 조성

## ■ 인증제도 정비

- 과정 중심의 인증제도 강화
  - 선의의 친환경농업인 피해 방지 및 소비자 신뢰 유지를 위한 관련 제도 조정('26, 시행규칙 개정)
  - 현장 애로사항 해결(드론에 의한 비산, 단체인증 제도개선 등), 불필요한 인증절차와 과도한 입증책임 등 농업인 부담 완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기후변화 등 불가항력 요인을 고려한 인증기준 도입 등
- 인증마크 체계 개선
  - 친환경 인증의 인지도 제고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소비자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추진('26~)
  - 인증마크 체계 개선('26) 및 법령 정비 : 통일된 인증마크, 인증제도 차별화, 제품 구매력 향상 등 고려
- 친환경-저탄소 인증 연계

- 친환경인증 농가의 저탄소인증 취득 절차 간소화 및 면제 방안 마련
- 탄소감축 효과 입증 후 일괄 신청서 도입, 점검방식 통합 운영 등 인증 절차 간소화('27)
- 유기농업자재 기준 개선
  - 허용물질 사용가능 기준 개선, 복잡한 등록절차 및 제한된 시험방법 등에 대한 공시기준 개선
  - 유기농업자재 활용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개선('26),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 인증기관 육성
  - 국제표준화 기준(ISO/IEC 17065) 제도 도입, 인증기관 전문성 향상 및 친환경인증 소비자 신뢰 제고
  - 인증기관의 위반행위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27)
  - 인증심사 적정성 평가 및 인증관리 효율화를 위한 심사원 역량 강화('26)

## 2) 농업환경 보전 지속 추진

### ■ 농지 및 수질 보전

- 농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대폭 확대
  - 화학비료 사용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도록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대상 단계적 확대
  - 토양검정 분석 인프라 확충 및 분석역량 제고, 관련 기술 보급 및 교육·홍보 확대 추진
- 노지 스마트팜 및 정밀농업 확산
  - 노지 관행농업을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체계로 전환, 화학 농자재 적정 사용 유도 및 지속가능성 향상
  - 발농업 주산지 중심 기술도입 기반조성 및 현장 검증된 패키지(기자재+서비스) 보급('26~'28), 시범단지 내 농업인 대상 교육·체험장 조성('26~'30)
  - 기후변화 대응 정밀 토양 양분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화학비료 적정 사용기반 마련 등 정밀농업 확산
- 농업용수 수질 관리 강화
  - 농업용 저수지 등 수질개선과 사업관리 방식 정비, 수질정보 측정 인프라 확충, 오염 예보 시스템 구축
  - 농업 활동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등 과학적 토대 마련

---

○ 농업환경변동조사 확대·개편

- 농업 환경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환경이 농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할 수 있도록 개편
- 조사 결과가 농업환경 정책에 활용되도록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교류 및 환류체계 구축
- 농업 환경조사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항, 유사 입법 사례를 참고한 법적 근거 강화

■ 농업 생태계 개선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개편

- 프로그램 확대, 관행농가가 저투입농법과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등 참여하도록 지원
- 신규 마을 선정 재개를 검토, 농업환경 개선 효과와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사업 개선
-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활동 등을 확산시켜 환경친화적 전환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 검토

○ 미생물 농자재 생산·보급 확대

- 화학농자재 보완 및 대체를 위한 미생물 발굴, 제품 관리 강화
- 미생물 농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보급 및 재해대응책 마련

- 현장 맞춤형 천적 이용기술, 미생물 등 천연자원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기술 등 연구개발
- 지역별 병해충 조기경보, 긴급방제 시스템, 재난 시 자재 공급 등 지원 검토

■ 탄소 감축

○ 저탄소 농업 유인체계 구축

-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효과성 검증 및 탄소크레딧 등 저탄소 농업의 기반 구축
- 농가의 기후변화 적응 활동 유인체계 마련,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보급 등 저탄소 시스템 전환

○ 저탄소 농업 기술 개발·보급

- 논물관리, 비료 적정사용, 바이오차 등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보급
- 유기농경지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저장 증진 유도

## ■ 가축분뇨 및 영농폐기물 관리 강화

- 농업부산물 자원화 및 영농폐기물 관리 강화
  - (농업부산물) 탄소중립형 자원화 기술 개발 및 순환 이용체계 구축
  - (영농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수거시설 확충 및 집중 수거기간 운영
- 가축분뇨 자원화 및 경축순환 활성화
  - '지역단위 가축분뇨 자원순환 계획' 수립, 가축분뇨 처리 혁신체계 도입 시범지구 3개소 조성(~'30)
  - 지역별 농·축협 중심의 '경축순환 협의체' 운영, 경종농가·축산농가 선순환 체계 마련('25~)
  - 적정 퇴액비량 초과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정화, 고체연료가 가능한 시설·장비 지원

## 라. 추진체계

### 1) 협업체계 구축

- (가칭)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설치 :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설치 :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협력체계 구축, 계획의 실천 유도
- 농업과 환경 부서 협력 및 통합정책 추진 : 친환경농업, 탄소중립, 축산환경, 경축순환 등 관련 분야

### 2) 평가 및 환류 체계 강화

- 친환경농업 국정과제 이행 평가 : 유기농업면적 2배 확대, 친환경직불 단가 인상, 임산부대상 친환경농산물 지원 재개 등
- 계획의 주요 과제별 추진 실적 점검 : 주요 성과 발굴, 홍보 및 인센티브 등 제공
- 계획 3년차 상반기 중간 평가 실시 : 정책추진 점검단 구성, 필요시 제6차 계획 수정

---

### 3) 친환경농업 현장지원 체계 강화

- 친환경농업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와 친환경농업인 연결 지원체계 마련
- 현장 지원체계의 운영 성과를 평가, 필요시 조직체계 마련 등 제도화 방안 검토

### 4) 친환경농업 통계 및 실태조사 확대

- 친환경농업 관련 통계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정책 활용도를 제고, 유통·소비 분야 등으로 확대
-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학교급식 확대 등 현안과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학술연구 지속 추진

---

## 2. 전북자치도 친환경농업 정책

### 가. 추진방향

#### 1)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 내실화
- 저비용 친환경농업 구현을 위해 집단화된 친환경농업지구 내실화
- 새만금의 농업용지를 친환경·유기농 농업 집적지구로 개발
- 친환경농가와 멘토+멘티 결연 교육으로 친환경 청년농업인 육성
- 학교·공공급식, 임산부 등 수요가 많은 과일, 과채류 등 품목 다양화 지원

#### 2)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 생산자는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는 적절한 가격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통소비 시스템 구축
- 지역 푸드플랜을 통한 학교·공공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공급
- 친환경 농산물 유통·가공·체험·소비가 가능한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를 조성,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소비 확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친환경농산물 홍보·소비 확대 유도
- 생산·유통단계 소비자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농산물 유통관리

#### 3) 생태농업 기반구축

- 화학비료 중심의 관행농업 개선, 가축분뇨 등 농촌환경 유해 요소를 재활용한 선순환 구조 조성, 직불금 지원 등 생태농업 기반 구축

- 농가의 친환경 인증 편의성 제고 및 GAP 인증과 연계 도모
- 친환경·GAP인증 농가에 대한 저탄소 농산물인증 확대 유도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단위 농업환경 보전 개선
-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 내 가축분뇨 발생량, 퇴비화 사용량 등 지역여건 분석을 통한 화학비료 감축과 분뇨 재활용 체계 구축
- 영농부산물·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방안 농가 교육홍보로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보전·개선,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나. 추진현황

###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 ('20) 5,633ha → ('25) 7,000 / 4,922ha (2.078 감소)

### ■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률 : ('20) 48.4% → ('25) 58 / 72% (14% 증가)

### ■ 생태농업 확산기반 구축

- 화학비료 감축 : ('20) 266kg/ha → ('25) 233 / ('23) 242 (9% 감축)
- 합성농약 감축 : ('20) 10.9kg/ha → / ('23) 13 (19.2% 증가)
- 저탄소농업 인증농가 : ('20) 471호 → ('25) 680 / ('23) 2,496 (1,816 증가)

### ■ 친환경농업 예산

- 예산지원액 : ('05) 1,470억원 → ('15) 731 → ('05) 543

[표 2-4] 전라북도 제5차 농업환경보전 실천 5개년 계획

비전	생태환경 보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 ('20) 5,633ha → ('22) 6,100 → ('25) 7,000</li> </ul> </li> <li>◇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률 : ('20) 48.4% → ('22) 55 → ('25) 58</li> </ul> </li> <li>◇ 생태농업 확산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비료 감축 : ('20) 266kg/ha → ('22) 252 → ('25) 233</li> <li>○ 저탄소농업 인증농가 : ('20) 471호 → ('22) 570 → ('25) 680</li> </ul> </li> </ul>	
<p>추진 전략</p>	<p>①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li> <li>•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li> <li>•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li> <li>•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li> <li>• 친환경농업인 대회 등 지원</li> <li>• 친환경농업인 전문지 보급</li> <li>• 친환경농업인 교육 운영</li> </ul>
	<p>②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지원</li> <li>• 친환경농산물 학교·어린이 급식 지원</li> <li>•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li> <li>•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로 친환경농산물 출하 확대</li> <li>•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li> <li>• 친환경 유기농박람회 참가 지원</li> <li>•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li> </ul>
	<p>③ 생태농업 확산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운영 지원</li> <li>•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li> <li>•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확대</li> <li>• 환경친화형 농자재(유기질 비료·토양개량제 등) 지원</li> <li>•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지원</li> <li>• 영농부산물 활용 지원</li> <li>• 친환경농업 국·도비 직불금 지원</li> <li>•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비용 지원</li> <li>• 도농상생 공공급식·GAP 안전성 분석지원</li> </ul>

출처 : 제5차 농업환경보전 실천 5개년 계획(2021)

## 다.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과 비교

### 1) 정책의 범위 확장

- 전북자치도 제5차 계획 체계는 친환경농업 육성 위한 3대 전략(생산기반 확충, 유통·소비 활성화, 생태농업 확산)을 중심으로 추진
- 정부가 수립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은 농업환경 보전을 강화한 2대 축을 설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대폭 확장한 것이 특징 적임

[표 2-5] 전북자치도 정책과 정부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비교

구분	전북자치도(5차 계획)	정부(6차 계획)
정책 축	1개 축 (친환경농업 육성)	2개 축 (친환경농업 육성 + 농업환경 보전)
관리 범위	친환경 인증농가 중심	인증농가 + 관행농가 (농업 전반)
환경 요소	화학비료, 저탄소	토양, 수질, 생태계, 탄소, 가축분뇨 등 통합
정책 대상	친환경 실천농가	친환경농가 + 전체 농업인

### 2)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정부는 토양, 수질, 생태계, 탄소 등 농업환경 전반의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제시하고, 친환경 인증농가뿐만 아니라 관행농가까지 포괄하여 환경친화적 전환을 추진
- 토양관리(토양검정 기반 확충, 공익직불-시비처방 연계), 수질관리(농업용수 수질 관리 강화, 농업환경변동조사 확대), 생태계(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직불제 전환, 미생물 농자재 보급), 탄소중립(저탄소농업 유인체계 구축, 탄소중립직불 도입) 등이 특징적임
- 정부는 통합적 농업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친환경농어업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공익직불법 시행령, 인증기준, 인증마크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

### 3) 정책목표 설정 강화

- 정부는 친환경 면적 확대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경지면적 대비 비율과 함께 절

---

대 면적을 병행하여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050년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

- 인증면적이 가장 넓은 쌀을 전략작물로 설정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목표 관리 및 공공비축을 통해 친환경 쌀 재배 확대를 추진할 계획
- 공공비축과 연계하여 판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며, 전북자치도는 쌀 중심의 생산단지 육성사업 등을 통해 향후 정책추진이 확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4) 전북자치도 정책 대응과제

- 직불제도 대응 : 농업환경보전 직불 준비, 탄소중립직불 대비를 위한 예산 확보
- 생산기반 강화 : 새만금 본격 추진, 농지은행 연계, 특성화 집적지구 고도화 추진
- 공공수요 확대 : 공공비축 연계 확대, 공공기관 의무화, 새로운 수요처 발굴 및 확대
- 토양 기반 : 토양검정 기반 확충, 공익직불 연계 추진, 화학비료 감축 목표 실현
- 미생물 체계 : 시군 배양센터 운영 및 품질 관리, 현장 보급 활성화 지원
- 정밀농업 :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 확대,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 적용
- 저탄소 강화 : 인증 농가 확대 지원, 배출량 측정 및 관리, 인센티브 제도 도입

### 3.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인증 현황

#### 가. 전북특별자치도

##### 1) 인증 농가

- 전북의 친환경인증 농가수는 2020년 4,136호에서 전국 감소율(4.8%)보다 소폭 낮은 4.5%의 감소세를 보여 2024년에는 3,439호로 집계됨

[표 2-6]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 현황

(단위 : 호)

구분		2020	2024	연평균 증감률 (‘24/’20)	
전 국	유기농	농가수	23,750	24,287	0.6%
		비 율	40.1%	49.9%	
	무농약	농가수	35,499	24,381	-9.0%
		비 율	59.9%	50.1%	
	계	농가수	59,249	48,668	-4.8%
		비 율	100.0%	100.0%	
전 북	유기농	농가수	1,417	1,679	4.3%
		비 율	34.3%	48.8%	
	무농약	농가수	2,719	1,760	-10.3%
		비 율	65.7%	51.2%	
	계	농가수	4,136	3,439	-4.5%
		비 율	100.0%	100.0%	
점 유 율	유기농	6.0%	6.9%		
	무농약	7.7%	7.2%		
	계	7.0%	7.1%		

자료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구분 시 유기농 농가는 증가하고 무농약 농가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전북은 유기농 농가의 연평균 증감률이 4.3%로 높은 반면에 무농약 농가는 -10.3%로 크게 감소하여 친환경농법 변화가 전국보다 현격하게 나타남

- 전북 친환경농산물 농가의 전국 점유율은 2020년 7.0%에서 유기농산물 농가의 증가 영향으로 0.1%p 증가한 7.1%로 파악되었음
  - 전북 유기농산물 농가의 전국 점유율은 2020년 6.0%에서 0.9%p 높아진 6.9%로 확대된 반면, 무농약 재배농가는 0.5%p 감소한 7.2%로 나타나, 향후 유기농 재배농가가 무농약 재배농가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됨

## 2) 인증 면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전국과 전북 모두 감소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전국의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면적은 2020년 81,827ha에서 연평균 4.5%씩 감소한 68,165ha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연평균 3.3%씩 감소해 2024년 4,922ha로 파악되었음

[표 2-기]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현황

(단위 : ha)

구분			2020	2024	연평균 증감률 ('24/'20)
전국	유기농	면적	38,540	37,617	-0.6%
		비율	47.1%	55.2%	
	무농약	면적	43,286	30,548	-8.3%
		비율	52.9%	44.8%	
	계	면적	81,827	68,165	-4.5%
		비율	100.0%	100.0%	
전북	유기농	면적	2,403	2,805	3.9%
		비율	42.7%	57.0%	
	무농약	면적	3,230	2,116	-10.0%
		비율	57.3%	43.0%	
	계	면적	5,633	4,922	-3.3%
		비율	100.0%	100.0%	
점유율	유기농		6.2%	7.5%	
	무농약		7.5%	6.9%	
	계		6.9%	7.2%	

자료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전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의 규모화가 전국 대비 더욱 확대되는 추세임
  -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는 2020년 호당 1.38ha로 전북의 1.36ha보다 넓었으나, 2024년 들어 전국이 호당 1.40ha로 확대 폭이 미미한 가운데 전북은 호당 1.43ha로 전국을 상회함
- 전국과 전북 모두 유기농 재배농가의 호당 면적 규모가 무농약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2024년 전국 유기농 재배농가의 호당 면적은 1.55ha로 무농약 1.25보다 0.3ha 컸으며, 전북은 유기농 재배농가의 호당 면적은 1.67ha, 무농약은 1.20으로 0.47ha 더 컸음

[표 2-8] 친환경농산물 호당 인증 면적 현황

(단위 : ha/호)

구분		2020	2024	연평균 증감률 ('24/'20)
전국 (A)	유기농	1.62	1.55	-1.2%
	무농약	1.22	1.25	0.7%
	계	1.38	1.40	0.4%
전북 (B)	유기농	1.70	1.67	-0.4%
	무농약	1.19	1.20	0.3%
	계	1.36	1.43	1.2%
차이 (B)-(A)	유기농	0.07	0.12	
	무농약	-0.03	-0.05	
	계	-0.02	0.03	

자료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3) 출하량

- 2020년 대비 2024년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전국과 전북 모두 감소하였고, 유기농과 무농약도 감소 추세로 나타남
- 다만 전북의 감소폭은 전국을 크게 상회하였고, 이에 따라 전북의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점유율은 2020년 7.2%에서 2024년 5.7%로 대폭 낮아짐
- 특히 전북 유기농산물의 출하량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2020년 13,593톤이던 유기농산물은 연평균 10.8%씩 감소해 2024년 8,603톤으로 집계됨

- 무농약농산물도 전국이 매년 0.7%씩 감소한 반면 전북은 4.3% 감소하였고, 2020년 전국에서 전북의 점유율은 6.1%였으나 2024년에는 0.8%p 감소한 5.3%로 나타났다

[표 2-9]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현황

(단위 : 톤)

구분		2020	2024	연평균 증감률 ('24/'20)	
전국	유기농	출하량	137,781	125,073	-2.4%
		비율	27.8%	26.5%	
	무농약	출하량	358,013	347,779	-0.7%
		비율	72.2%	73.5%	
	계	출하량	495,794	472,852	-1.2%
		비율	100.0%	100.0%	
전북	유기농	출하량	13,593	8,603	-10.8%
		비율	38.3%	31.9%	
	무농약	출하량	21,892	18,389	-4.3%
		비율	61.7%	68.1%	
	계	출하량	35,486	26,992	-6.6%
		비율	100.0%	100.0%	
점유율	유기농	9.9%	6.9%		
	무농약	6.1%	5.3%		
	계	7.2%	5.7%		

자료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전국 친환경농산물 호당 출하량은 2020년 호당 8.4톤에서 연평균 3.8%씩 증가해 2024년 9.7톤까지 높아진 반면에 전북은 2020년 호당 8.6톤에서 2024년 연평균 2.2%씩 감소한 7.8톤으로 집계됨
- 특히 전북은 유기농산물의 감소율이 컸는데 2020년 호당 9.6톤이었던 유기농산물 출하량은 2024년 들어 5.1톤까지 하락함
- 반면에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호당 출하량이 오히려 증가했으며, 2020년 8.1톤이었던 호당 출하량은 2024년 들어 10.4톤으로 2.3톤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전국과 비교해 보면 2024년 전국은 무농약농산물의 호당 출하량이 14.3톤이었고, 전북은 이보다 3.8톤 낮은 10.4톤으로 나타나, 전북의 무농약농산물 단위 농가당 출하량이 전국보다 적은 편임

[표 2-10] 친환경농산물 호당 출하량 현황

(단위 : 톤/호)

구분		2020	2024	연평균 증감률 ('24/'20)
전국 (A)	유기농	5.8	5.1	-2.9%
	무농약	10.1	14.3	9.1%
	계	8.4	9.7	3.8%
전북 (B)	유기농	9.6	5.1	-14.5%
	무농약	8.1	10.4	6.7%
	계	8.6	7.8	-2.2%
차이 (B)-(A)	유기농	3.8	0.0	
	무농약	-2.0	-3.8	
	계	0.2	-1.9	

자료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4) 생산성(단수)<sup>1)</sup>

- 생산성을 단위당(ha) 수확량(톤)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단수는 2020년 ha당 6.1톤에서 매년 3.4%씩 증가해 2024년 ha당 6.9톤으로 집계된 반면에 전북은 오히려 2020년 ha당 6.3톤에서 연평균 3.4% 감소해 2024년은 ha당 5.5톤으로 축소됨
- 생산성은 일반적으로 농법상 무농약농산물이 유기농산물 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2020년 대비 2024년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무농약농산물이 매년 8.3%씩 상승한 반면 유기농은 1.8%씩 감소해 상호 생산성의 격차가 더 커졌음
  - 특히 전북은 유기농산물에서 급격한 하락을 나타냈으며, 2020년 전북 유기농산물 단수는 ha당 5.7톤에서 매년 14.2%씩 감소해 2024년 3.1톤까지 축소됨
  - 생산성이 급격히 나빠진 원인으로 전북의 친환경농산물은 벼가 2024년 44.2%(전국 곡류 22.5% 점유)를 차지하는데 2024년 전북의 벼멸구 피해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상대적으로 벼멸구 피해에 취약한 유기농산물의 생산성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1) 시도별로 주력 품목과 다양성에 따라 생산성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증감률 추이와 전국 대비 전북의 상대적인 크기를 측정함에 의의를 둠

[표 2-11]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성 현황

(단위 : 톤/ha)

구분		2020	2024	연평균 증감률 (‘24/’20)
전국	유기농	3.6	3.3	-1.8%
	무농약	8.3	11.4	8.3%
	계	6.1	6.9	3.4%
전북	유기농	5.7	3.1	-14.2%
	무농약	6.8	8.7	6.4%
	계	6.3	5.5	-3.4%
차이 (B)-(A)	유기농	2.1	-0.3	
	무농약	-1.5	-2.7	
	계	0.2	-1.5	

자료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5) 부류별 출하량

- 2024년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부류별 출하량 비중은 특용작물이 35.7%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채소류(29.6%), 곡류(22.5%) 순임
  - 2024년 유기농산물의 점유율은 곡류(50.1%) 채소류(29.5%), 과실류(6.4%) 순이었고, 무농약농산물은 특용작물(46.5%), 채소류(29.6%), 곡류(22.5%), 서류(6.8%) 순으로 파악됨
- 성장률을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4년 서류가 연평균 7.8%씩 가장 높게 상승하였고, 다음으로 두류(5.3%), 특용작물(1.9%), 채소류(1.1%) 순으로 집계됨
  - 유기농산물의 성장률은 채소류(2.3%), 특용작물(1.6%), 두류(1.5%), 약용작물(0.2%) 순으로 나타났고, 무농약농산물은 서류(10.5%), 두류(7.7%), 특용작물(1.9%) 순으로 파악됨
- 반면에 감소한 친환경농산물 부류는 기타(-13.4%), 과실류(-7.4%), 곡류(-7.3%), 약용작물(-6.5%) 순으로 파악됨

[표 2-12] 친환경농산물 부류별 출하량 현황

(단위 : 톤)

구분	2020			2024			연평균 증감률			
	유기농	무농약	계	유기농	무농약	계	유기농	무농약	계	
출하량	곡류	74,760	69,669	144,429	62,701	43,914	106,616	-4.3%	-10.9%	-7.3%
	과실류	8,609	12,209	20,818	8,066	7,222	15,288	-1.6%	-12.3%	-7.4%
	두류	495	724	1,218	525	973	1,498	1.5%	7.7%	5.3%
	서류	5,700	18,015	23,716	5,170	26,868	32,038	-2.4%	10.5%	7.8%
	약용작물	369	690	1,059	371	437	808	0.2%	-10.8%	-6.5%
	채소류	33,635	100,432	134,067	36,883	103,051	139,934	2.3%	0.6%	1.1%
	특용작물	6,661	149,918	156,579	7,101	161,743	168,844	1.6%	1.9%	1.9%
	기타	7,551	6,357	13,908	4,256	3,571	7,827	-13.4%	-13.4%	-13.4%
	합계	137,781	358,013	495,794	125,073	347,779	472,852	-2.4%	-0.7%	-1.2%
비중	곡류	54.3%	19.5%	29.1%	50.1%	12.6%	22.5%			
	과실류	6.2%	3.4%	4.2%	6.4%	2.1%	3.2%			
	두류	0.4%	0.2%	0.2%	0.4%	0.3%	0.3%			
	서류	4.1%	5.0%	4.8%	4.1%	7.7%	6.8%			
	약용작물	0.3%	0.2%	0.2%	0.3%	0.1%	0.2%			
	채소류	24.4%	28.1%	27.0%	29.5%	29.6%	29.6%			
	특용작물	4.8%	41.9%	31.6%	5.7%	46.5%	35.7%			
	기타	5.5%	1.8%	2.8%	3.4%	1.0%	1.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나. 시군별 생산현황

### 1) 농가

- 2024년 전북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순창이 833호(24.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주 412호(12.0%), 군산 408호(11.9%) 순이며, 연평균 증감률은 임실(3.1%)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나타냈음
- 유기농산물은 순창이 439호(26.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군산 267(15.9%) 전주

155호(9.2%), 고창 142(8.5%) 순이며, 특징적인 부분은 연평균 증감률은 전체 친환경 농산물과 달리 다수의 유기농산물 농가에서 증가세가 나타났음

- 연평균 증감률이 높았던 지역은 순창(27.3%), 임실(26.4%), 무주(18.9%), 장수(7.5%) 등에서 나타난 반면에 김제는 매년 18.3%씩 급격히 감소하였음
- 무농약농산물 재배농가는 모든 시군에서 모두 감소하였고 김제(-20.1%)가 특히 높았음

[표 2-13]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현황

(단위 : 호)

구분	2020			2024			연평균 증감률		
	유기농	무농약	계	유기농	무농약	계	유기농	무농약	계
전북	1,417	2,719	4,136	1,679	1,760	3,439	4.3%	-10.3%	-4.5%
고창	119	168	287	142	114	256	4.5%	-9.2%	-2.8%
군산	274	218	492	267	141	408	-0.6%	-10.3%	-4.6%
김제	120	98	218	54	40	94	-18.1%	-20.1%	-19.0%
남원	121	142	263	98	113	211	-5.1%	-5.6%	-5.4%
무주	19	162	181	38	99	137	18.9%	-11.6%	-6.7%
부안	79	76	155	74	58	132	-1.6%	-6.5%	-3.9%
순창	167	717	884	439	394	833	27.3%	-13.9%	-1.5%
완주	87	227	314	91	146	237	1.1%	-10.4%	-6.8%
익산	113	255	368	112	155	267	-0.2%	-11.7%	-7.7%
임실	9	69	78	23	65	88	26.4%	-1.5%	3.1%
장수	12	54	66	16	39	55	7.5%	-7.8%	-4.5%
전주	138	283	421	155	257	412	2.9%	-2.4%	-0.5%
정읍	86	83	169	81	56	137	-1.5%	-9.4%	-5.1%
진안	73	167	240	89	83	172	5.1%	-16.0%	-8.0%

자료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 면적

- 2024년 전북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농가수에 이어 면적도 순창이 1,066ha(21.7%)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고창 838ha(17.0%), 익산 451ha(9.2%), 진안 421ha(8.6%), 군산 409ha(10.8%) 순임
- 확장성은 전북 면적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매년 3.3%씩 감소하는 가운데 장수는 매년 8.7%씩 성장한 반면 김제(-15.6%)는 면적 감소세가 가장 컸음

- 2024년 유기농산물은 순창 639ha(22.8%), 고창 525ha(18.7%), 군산 300ha(10.7%) 순으로 면적이 넓었으며, 성장 수준은 무주가 매년 38.7%로 가장 확장성이 큰 반면에 김제시는 매년 12.7%씩 감소함
- 무농약농산물도 순창이 427ha(20.2%)로 가장 면적이 넓었으며, 확장성은 고창(6.8%), 장수(6.6%), 남원(1.7%)을 제외한 대부분 시군에서 감소하는 추세임

[표 2-14]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현황

(단위 : ha)

구분	2020			2024			연평균 증감률		
	유기농	무농약	계	유기농	무농약	계	유기농	무농약	계
전 북	2,403	3,230	5,633	2,805	2,116	4,922	3.9%	-10.0%	-3.3%
고 창	485	241	726	525	313	838	2.0%	6.8%	3.7%
군 산	315	211	526	300	110	409	-1.3%	-15.0%	-6.1%
김 제	141	141	282	82	61	143	-12.7%	-18.8%	-15.6%
남 원	179	133	312	138	142	280	-6.3%	1.7%	-2.7%
무 주	26	214	240	96	126	222	38.7%	-12.4%	-2.0%
부 안	199	87	286	169	74	243	-4.0%	-3.9%	-4.0%
순 창	233	1,020	1,252	639	427	1,066	28.7%	-19.5%	-3.9%
완 주	103	169	272	97	114	211	-1.5%	-9.3%	-6.1%
익 산	267	317	584	272	179	451	0.5%	-13.3%	-6.2%
임 실	18	88	106	31	85	116	14.5%	-0.8%	2.3%
장 수	18	48	66	30	62	92	13.8%	6.6%	8.7%
전 주	75	197	273	86	143	229	3.3%	-7.7%	-4.3%
정 읍	168	117	285	148	52	200	-3.2%	-18.2%	-8.5%
진 안	176	248	424	193	228	421	2.4%	-2.1%	-0.2%

자료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호당 친환경 인증 면적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4년 장수가 매년 13.7%씩 가장 빠르게 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반면에 전주는 매년 3.8%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유기농산물은 무주가 매년 16.6%씩 증가한 반면에 임실은 9.4%씩 감소하고, 무농약 농산물은 고창(17.7%), 진안(16.5%), 장수(15.6%)가 크게 성장한 반면에 정읍은 연평균 9.7%씩 호당 면적이 감소하였음

[표 2-15]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호당 인증 면적 현황

(단위 : ha/호)

구분	2020			2024			연평균 증감률		
	유기농	무농약	계	유기농	무농약	계	유기농	무농약	계
전 북	1.7	1.2	1.4	1.7	1.2	1.4	-0.4%	0.3%	1.2%
고 창	4.1	1.4	2.5	3.7	2.7	3.3	-2.4%	17.7%	6.7%
군 산	1.2	1.0	1.1	1.1	0.8	1.0	-0.6%	-5.3%	-1.6%
김 제	1.2	1.4	1.3	1.5	1.5	1.5	6.6%	1.6%	4.2%
남 원	1.5	0.9	1.2	1.4	1.3	1.3	-1.2%	7.6%	2.9%
무 주	1.4	1.3	1.3	2.5	1.3	1.6	16.6%	-1.0%	5.1%
부 안	2.5	1.1	1.8	2.3	1.3	1.8	-2.4%	2.8%	0.0%
순 창	1.4	1.4	1.4	1.5	1.1	1.3	1.1%	-6.5%	-2.5%
완 주	1.2	0.7	0.9	1.1	0.8	0.9	-2.6%	1.3%	0.7%
익 산	2.4	1.2	1.6	2.4	1.2	1.7	0.7%	-1.8%	1.6%
임 실	2.0	1.3	1.4	1.3	1.3	1.3	-9.4%	0.7%	-0.7%
장 수	1.5	0.9	1.0	1.9	1.6	1.7	5.9%	15.6%	13.7%
전 주	0.5	0.7	0.6	0.6	0.6	0.6	0.3%	-5.5%	-3.8%
정 읍	2.0	1.4	1.7	1.8	0.9	1.5	-1.8%	-9.7%	-3.6%
진 안	2.4	1.5	1.8	2.2	2.7	2.4	-2.5%	16.5%	8.5%

자료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3) 출하량

- 2024년 전북의 친환경농산물 시군별 출하량은 고창이 유일하게 무농약농산물이 대폭 증가(매년 65.5%)에 따라 7,82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주(3,222톤), 익산(2,999톤), 군산(1,945톤) 순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유기농산물 출하량은 익산(1,394톤), 군산(1,361톤), 부안(1,289톤), 순창(1,043톤) 등 4개 지역이 1,000톤을 넘겼으며, 성장 수준은 순창이 연평균 9.0%, 고창이 4.1%씩 증가했고 나머지 시군은 감소세로 나타남
- 무농약농산물은 고창의 급격한 성장으로 2024년 전북의 38.3%(7,048톤)를 점유하였고, 다음으로는 전주(2,837톤), 익산(1,606톤), 남원(1,090톤) 순으로 파악됨

[표 2-16]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출하량 현황

(단위 : 톤)

구분	2020			2024			연평균증감률		
	유기농	무농약	계	유기농	무농약	계	유기농	무농약	계
전 북	13,593	21,892	35,486	8,603	18,389	26,992	-10.8%	-4.3%	-6.6%
고 창	663	940	1,603	780	7,048	7,827	4.1%	65.5%	48.7%
군 산	2,308	1,965	4,273	1,361	585	1,945	-12.4%	-26.1%	-17.9%
김 제	1,346	972	2,318	305	967	1,272	-31.0%	-0.1%	-13.9%
남 원	1,306	1,431	2,736	579	1,090	1,669	-18.4%	-6.6%	-11.6%
무 주	100	409	509	56	266	322	-13.6%	-10.2%	-10.8%
부 안	1,816	713	2,529	1,289	463	1,752	-8.2%	-10.2%	-8.8%
순 창	739	2,443	3,182	1,043	775	1,817	9.0%	-25.0%	-13.1%
완 주	375	1,608	1,983	286	899	1,186	-6.5%	-13.5%	-12.1%
익 산	2,097	3,236	5,333	1,394	1,606	2,999	-9.7%	-16.1%	-13.4%
임 실	260	999	1,259	106	465	571	-20.1%	-17.4%	-17.9%
장 수	101	281	381	65	351	416	-10.4%	5.8%	2.2%
전 주	549	4,538	5,087	385	2,837	3,222	-8.5%	-11.1%	-10.8%
정 읍	1,106	1,268	2,374	689	409	1,099	-11.1%	-24.6%	-17.5%
진 안	827	1,090	1,918	266	628	894	-24.7%	-12.9%	-17.4%

자료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호당 친환경 인증 출하량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4년 고창이 매년 53.0%씩 호당 출하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그 다음인 장수(7.0%), 김제(6.2%)와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급격한 성장임을 인지할 수 있음
- 유기농산물은 전북이 2020년 대비 2024년 매년 14.5%씩 감소하는 가운데 14개 모든 시군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임실은 전북에서도 가장 감소세가 큰 매년 -36.8%씩 호당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음
-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고창의 호당 출하량의 연평균 증감률이 매년 82.3%씩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김제 24.9%, 장수 14.7%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무농약농산물의 호당 출하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지역은 군산이 매년 -17.6%로 가장 두드러지며 다음으로 정읍(-16.8%), 임실(-16.1%), 순창(-11.8%) 순임

[표 2-17]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호당 인증 출하량 현황

(단위 : 톤/호)

구분	2020			2024			연평균증감률		
	유기농	무농약	계	유기농	무농약	계	유기농	무농약	계
전 북	9.6	8.1	8.6	5.1	10.4	7.8	-14.5%	6.7%	-2.2%
고 창	5.6	5.6	5.6	5.5	61.8	30.6	-0.4%	82.3%	53.0%
군 산	8.4	9.0	8.7	5.1	4.1	4.8	-11.8%	-17.6%	-13.9%
김 제	11.2	9.9	10.6	5.6	24.2	13.5	-15.8%	24.9%	6.2%
남 원	10.8	10.1	10.4	5.9	9.6	7.9	-14.0%	-1.1%	-6.6%
무 주	5.3	2.5	2.8	1.5	2.7	2.3	-27.4%	1.6%	-4.4%
부 안	23.0	9.4	16.3	17.4	8.0	13.3	-6.7%	-3.9%	-5.0%
순 창	4.4	3.4	3.6	2.4	2.0	2.2	-14.4%	-12.8%	-11.8%
완 주	4.3	7.1	6.3	3.1	6.2	5.0	-7.6%	-3.4%	-5.7%
익 산	18.6	12.7	14.5	12.4	10.4	11.2	-9.5%	-4.9%	-6.2%
임 실	28.9	14.5	16.1	4.6	7.2	6.5	-36.8%	-16.1%	-20.4%
장 수	8.4	5.2	5.8	4.1	9.0	7.6	-16.6%	14.7%	7.0%
전 주	4.0	16.0	12.1	2.5	11.0	7.8	-11.1%	-8.9%	-10.3%
정 읍	12.9	15.3	14.0	8.5	7.3	8.0	-9.8%	-16.8%	-13.1%
진 안	11.3	6.5	8.0	3.0	7.6	5.2	-28.4%	3.8%	-10.2%

자료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4.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 현황

### 1) 주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출하처

- 2023년 주요 친환경농산물<sup>2)</sup>의 생산자 출하처는 도매시장이 3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농협 23.4%, 생산자단체 7.9%, 수출 6.4%로 파악됨
- 쌀 제외 청과물인 경우, 도매시장이 48.6%로 더욱 집중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생산자단체 9.5%, 수출 9.1%, 대형유통업체 7.2% 순으로 나타남

[표 2-18] 2023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출하처

(단위 : %)

구분		전체 농산물	쌀 제외 청과물
합계		100.0	100.0
유통 단계	생산자단체	7.9	9.5
	지역농협	23.4	1.7
	전문유통업체	1.2	1.8
	도매시장	37.8	48.6
	저장	-	-
	소계	70.3	61.6
소비 단계	가공업체	0.5	0.6
	대형유통업체	2.7	7.2
	생협	5.0	4.7
	친환경전문점	1.8	1.7
	급식 전체(학교)	6.1(6.1)	7.0(6.9)
	온라인업체	4.1	5.3
	중소형마트	-	-
	직거래	1.4	1.8
	수출	6.4	9.1
	기타	1.6	1.0
	소계	29.6	38.4

출처 : 2024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조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11개 주요 친환경농산물은 쌀, 감자, 고구마, 무, 양파, 양배추, 배추, 딸기, 방울토마토, 감귤, 새송이버섯임

## 2) 주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수취율

- 2024년 주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수취율은 54.2%로 파악되었으며, 생산자 수취율이 높은 품목은 방울토마토(64.0%), 배추(62.3%), 감자(62.3%) 순으로 조사됨
- 유통비용률은 평균 45.8%였으며, 소매단계(25.3%), 도매단계(13.5%), 출하단계(7.0%) 순으로 높고, 비용별로는 간접비(20.0%), 직접비(17.4%), 이윤(8.5%) 순이었음<sup>3)</sup>

[표 2-19] 2024년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수취율

(단위 : %)

품목	생산자 수취율	유통 비용률	유통비용률						
			비용별			단계별			
			직접비	간접비	이윤	출하	도매	소매	
식량 작물	백미	58.4	41.6	15.2	17.1	9.3	4.2	19.6	17.8
	감자	62.3	37.7	16.0	13.3	8.5	4.6	8.5	24.5
	고구마	45.5	54.5	19.8	29.7	5.0	6.1	10.1	38.3
채소	배추	62.3	37.7	21.4	7.3	9.0	14.3	8.6	14.8
	양파	50.9	49.1	11.2	26.4	11.5	2.9	12.6	33.5
과채	방울토마토	64.0	36.0	13.5	16.3	6.2	5.3	8.8	21.9
과일	감귤	36.5	63.5	21.3	29.9	12.3	5.3	23.3	34.9
특용작물	새송이버섯	53.9	46.1	20.5	19.9	5.8	13.1	16.7	16.3
조사작물 평균		54.2	45.8	17.4	20.0	8.4	7.0	13.5	25.3

출처 : 2024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조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출하경로별 생산자수취율은 학교급식이 7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소형마트 (57.3%), 친환경전문점(54.7%), 하나로마트(47.9%), 생협(43.4%) 순임

[표 2-20] 2024년 출하경로별 생산자수취율

(단위 : %)

구분	평균	학교급식	생협	대형마트	친환경전문점	하나로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수취율	54.2	72.4	43.4	37.0	54.7	47.9	57.3

출처 : 2024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조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직접비는 운송비, 포장재비, 상하차비, 수수료 등이 포함, 간접비는 내부인건비, 임대료, 수도광열비 등 포함

-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수취율이 높은 품목은 감자, 배추, 양파, 방울토마토 등인 반면에 일반농산물의 수취율이 높은 품목은 백미와 감귤로 조사되었음

[표 2-21]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수취율

(단위 : %)

구분	백미	감자	고구마	배추	양파	방울 토마토	감귤	새송이 버섯
'24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수취율	58.4	62.3	45.5	62.3	50.9	64.0	36.5	53.9
'23 일반농산물 생산자수취율	73.6	46.8	-	42.0	27.6	40.4	40.2	-

주 : 품목별 조사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자료 해석에 유의해야 함. 특히, 배추의 경우는 학교급식과 생협만을 조사한 것으로 다른 품목 대비 생산자수취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  
출처 : 2024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조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3)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구매처

- 친환경농산물 조사품목 11개의 최종 구매처는 급식 전체(31.7%)가 가장 많으며, 특히 학교급식이 28.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함
- 다음 구매처로는 중소형마트(26.0%), 대형유통업체(16.1%), 생협(7.2%), 수출(6.4%), 온라인업체(5.8%) 순으로 파악됨

[표 2-22] 2023년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구매처

(단위 : %)

구분	전체 농산물	쌀 제외 청과물
합계	100.0	100.0
가공업체	1.8	0.7
대형유통업체	16.1	22.2
생협	7.2	6.2
친환경전문점	2.1	2.2
급식 전체(학교)	31.7(28.3)	12.6(12.4)
온라인업체	5.8	7.0
중소형마트	26.0	37.0
직거래	1.4	1.8
수출	6.4	9.1
기타	1.6	1.0

출처 : 2024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조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쌀을 제외한 청과물은 급식의 비중이 전체 농산물보다 19.1%p 낮아진 12.6%로 나타난 반면에 중소형마트 37.0%, 대형유통업체가 22.2% 등이 과반을 차지함
- 품목별 최종구매처는 학교급식이 1순위인 품목은 쌀, 감자, 무, 양파, 방울토마토로 나타났으며, 생협은 양배추, 배추, 딸기, 감귤로 파악됨
- 또한 고구마는 대형유통업체에서 33.2%가 소비되고 있으며 새송이버섯은 중소형마트에서 47.1%가 구매되는 것으로 집계됨

[표 2-23] 2023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소비자 구매처

(단위 :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학교급식(28.3)	중소형마트(26.0)	대형유통업체(16.1)
쌀	학교급식(55.9)	그 외 급식(12.4)	생협(9.3)
감자	학교급식(67.2)	생협(15.7)	친환경전문점(7.2)
고구마	대형유통업체(33.2)	중소형마트(29.4)	온라인업체(20.1)
무	학교급식(52.1)	생협(27.7)	직거래(5.1)
양파	학교급식(62.6)	생협(12.4)	대형유통업체(5.8)
양배추	생협(27.0)	학교급식(20.9)	대형유통업체(20.4)
배추	생협(33.4)	학교급식(17.3)	가공업체(15.2)
딸기	생협(42.5)	학교급식(14.9)	직거래(11.9)
방울토마토	학교급식(32.5)	대형유통업체(28.5)	생협(13.1)
감귤	생협(31.7)	직거래(19.4)	학교급식(16.2)
새송이버섯	중소형마트(47.1)	대형유통업체(27.3)	수출(14.8)

출처 : 2024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조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4)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현황

- 2023년 학교급식 학교 수는 12,038개인 가운데 초등학교가 6,198개로 과반을 점유하고 있고, 중학교가 3,266개(27.1%), 고등학교 2,380개(19.8%) 등으로 파악됨
-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517개(20.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1,346개(11.2%), 경남 977개(8.1%) 경북 914개(7.6%) 순으로 나타남

[표 2-24] 2023년 학교급식 학교 현황

(단위 : 개)

구분	초	중	고	특수	전체	비중
서울	604	389	321	32	1,346	11.2%
부산	305	170	142	15	632	5.3%
대구	239	129	96	11	475	3.9%
인천	266	143	127	10	546	4.5%
광주	155	92	68	5	320	2.7%
대전	150	89	62	6	307	2.6%
울산	121	65	56	4	246	2.0%
세종	53	27	21	2	103	0.9%
경기	1,331	661	487	38	2,517	20.9%
강원	349	160	115	9	633	5.3%
충북	255	128	84	11	478	4.0%
충남	429	185	120	10	744	6.2%
<b>전북</b>	<b>419</b>	<b>212</b>	<b>133</b>	<b>10</b>	<b>774</b>	<b>6.4%</b>
전남	430	248	143	9	830	6.9%
경북	466	257	183	8	914	7.6%
경남	508	266	192	11	977	8.1%
제주	118	45	30	3	196	1.6%
전국	6,198	3,266	2,380	194	12,038	100.0%

출처 : 2023년 학교급식 실시현황(교육부)

- 2023년 학교급식 학생 수는 5,262,606명 중에서 초등학교 학생수가 2,621,928명으로 49.8% 점유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1,329,210명(25.3%), 고등학교 1,282,834명(24.4%), 특수학교 28,634명(0.5%)으로 파악됨
-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494,151명으로 28.4%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789,400명(15.0%), 경남 371,699명(7.1%), 인천 309,749명(5.9%) 순으로 조사됨

[표 2-25] 2023년 학교급식 학생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초	중	고	특수	전체	비중
서울	380,816	198,618	205,747	4,219	789,400	15.0%
부산	151,827	74,414	77,114	1,954	305,309	5.8%
대구	120,927	60,702	58,103	1,882	241,614	4.6%
인천	156,300	78,059	73,460	1,930	309,749	5.9%
광주	81,946	42,981	41,749	1,174	167,850	3.2%

구분	초	중	고	특수	전체	비중
대 전	74,888	39,030	39,014	1,116	154,048	2.9%
울 산	65,072	32,478	30,496	777	128,823	2.4%
세 종	32,284	15,321	11,991	428	60,024	1.1%
경 기	760,081	378,322	350,473	5,275	1,494,151	28.4%
강 원	69,350	36,928	36,756	863	143,897	2.7%
충 북	82,812	42,318	39,347	1,398	165,875	3.2%
충 남	117,193	59,447	56,783	1,344	234,767	4.5%
<b>전 북</b>	<b>87,416</b>	<b>48,309</b>	<b>47,726</b>	<b>1,120</b>	<b>184,571</b>	<b>3.5%</b>
전 남	87,374	46,185	45,199	1,181	179,939	3.4%
경 북	124,063	62,284	63,496	1,490	251,333	4.8%
경 남	189,048	93,916	86,797	1,938	371,699	7.1%
제 주	40,531	19,898	18,583	545	79,557	1.5%
전 국	2,621,928	1,329,210	1,282,834	28,634	5,262,606	100.0%

출처 : 2023년 학교급식 실시현황(교육부)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 학교급식 학교수는 1,190개소로 2020년 대비 연평균 1.5%씩 증가한 반면에 학생수는 196,178명으로 연평균 1.1%씩 감소하였음
-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이 2024년 41.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였고, 다음으로 고등학생(24.8%), 중학생(24.0%), 유치원생(8.2%), 특수학생(0.6%) 순으로 조사됨
- 학생수에 대한 2020년 대비 2024년 연평균 증감률은 전체 학생이 1.1%씩 감소하는 가운데 유치원생이 매년 20.1%씩 대폭 증가한 반면 초등학생은 3.6% 감소하고 있음

[표 2-26]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2020			2024			연평균 증감률	
	학교수	학생		학교수	학생		학교수	학생수
		명수	비율		명수	비율		
전 북	1,130	204,901	100.0%	1,199	196,178	100.0%	1.5%	-1.1%
유치원	355	7,697	3.8%	432	16,020	8.2%	5.0%	20.1%
초등학교	422	95,080	46.4%	415	82,238	41.9%	-0.4%	-3.6%
중학교	210	49,111	24.0%	209	48,067	24.5%	-0.1%	-0.5%
고등학교	133	51,945	25.4%	133	48,665	24.8%	0.0%	-1.6%
특수학교	10	1,068	0.5%	10	1,188	0.6%	0.0%	2.7%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학교급식에 활용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금액을 살펴보면, 2020년 친환경농산물은 57.1%를 점유하였고, 2024년은 매년 14.2% 상승해 62.8%까지 점유율이 확대되었음
- 학교 유형별로 연평균 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유치원의 친환경농산물 금액이 과거 대비 42.6%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16.2%), 중학교(14.5%), 초등학교(10.1%), 특수학교(8.7%) 순으로 파악됨

[표 2-27]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학교 유형별 급식 농산물 지출 금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일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20	유치원	274,552	48.1%	295,781	51.9%	570,333
	초등학교	3,483,293	42.3%	4,760,817	57.7%	8,244,110
	중학교	1,353,580	36.8%	2,321,808	63.2%	3,675,388
	고등학교	2,756,061	46.8%	3,131,192	53.2%	5,887,253
	특수학교	110,514	52.5%	100,084	47.5%	210,598
	합 계	7,978,000	42.9%	10,609,682	57.1%	18,587,682
2024	유치원	555,181	31.2%	1,224,329	68.8%	1,779,510
	초등학교	4,640,072	39.9%	6,984,432	60.1%	11,624,504
	중학교	2,353,330	37.1%	3,997,658	62.9%	6,350,988
	고등학교	3,014,938	34.6%	5,702,029	65.4%	8,716,967
	특수학교	121,828	46.6%	139,612	53.4%	261,440
	합 계	10,685,349	37.2%	18,048,060	62.8%	28,733,409
연평균 증감률	유치원	19.2%	-	42.6%	-	32.9%
	초등학교	7.4%	-	10.1%	-	9.0%
	중학교	14.8%	-	14.5%	-	14.7%
	고등학교	2.3%	-	16.2%	-	10.3%
	특수학교	2.5%	-	8.7%	-	5.6%
	합 계	7.6%	-	14.2%	-	11.5%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시군별로 학생수를 살펴보면, 2024년 전주가 84,29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군산(30,949명), 익산(29,905명), 정읍(10,068) 순으로 파악됨
- 학교당 학생수도 전주가 학교당 33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군산(216명), 익산(178명) 등 시를 중심으로 많고, 군에서는 완주가 유일하게 116명으로 규모가 큰 편

- 과거 대비 학생수 성장률은 전북이 1.1%로 감소하는 가운데 전주만 유일하게 매년 0.3%씩 증가하였고 나머지 시군은 모두 감소하였음

[표 2-28]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학교급식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20			2024			연평균 증감률		
	학교수	학생수	학교당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당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당 학생수
전 북	1,130	204,901	181	1,199	196,178	164	1.5%	-1.1%	-2.5%
고 창	61	5,311	87	61	4,661	76	0.0%	-3.2%	-3.2%
군 산	127	31,494	248	143	30,949	216	3.0%	-0.4%	-3.3%
김 제	94	7,451	79	88	6,769	77	-1.6%	-2.4%	-0.7%
남 원	77	8,306	108	75	7,139	95	-0.7%	-3.7%	-3.1%
무 주	29	2,176	75	29	1,861	64	0.0%	-3.8%	-3.8%
부 안	60	4,327	72	55	3,774	69	-2.2%	-3.4%	-1.2%
순 창	40	2,459	61	40	2,141	54	0.0%	-3.4%	-3.4%
완 주	81	10,269	127	85	9,826	116	1.2%	-1.1%	-2.3%
익 산	157	32,723	208	168	29,905	178	1.7%	-2.2%	-3.9%
임 실	41	1,858	45	36	1,515	42	-3.2%	-5.0%	-1.8%
장 수	29	1,943	67	29	1,610	56	0.0%	-4.6%	-4.6%
전 주	197	83,383	423	251	84,299	336	6.2%	0.3%	-5.6%
정 읍	99	11,244	114	101	10,068	100	0.5%	-2.7%	-3.2%
진 안	38	1,957	52	38	1,661	44	0.0%	-4.0%	-4.0%

주 : 학교 및 학생수는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합계임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시군별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전북이 2024년 친환경농산물 비율이 62.8%인 가운데 군산이 75.1%로 친환경 농산물 활용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익산(69.7%), 김제(69.3%), 전주(64.7%), 부안(64.0%) 순으로 평균을 상회함
- 친환경농산물 활용에 대한 금액 성장률은 전북이 매년 14.2% 증가하는 가운데 김제가 매년 37.4%씩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고, 다음으로 전주가 16.2%, 부안 16.0%, 익산 14.2%로 평균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나머지 시군은 감소하는 추세임
- 반면에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보다 일반농산물의 지출액 성장폭이 큰 지역은 완주(19.9%), 진안(12.5%), 정읍(8.9%) 순창(7.9%)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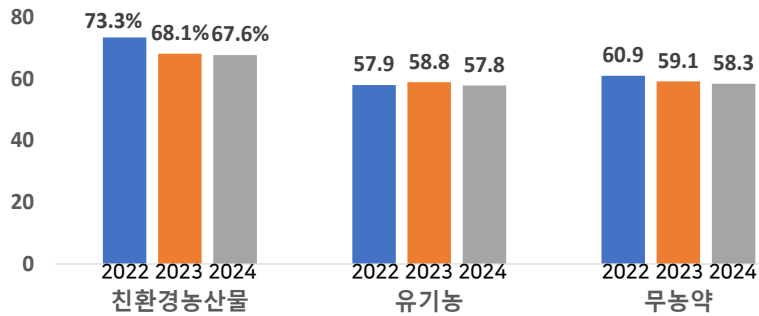
[표 2-29]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학교급식 농산물 지출 금액 현황

구 분	일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합계(천원)	
	금액(천원)	비율	금액(천원)	비율		
2020	전 북	7,978,000	42.9%	10,609,682	57.1%	18,587,682
	고 창	397,905	59.2%	274,152	40.8%	672,057
	군 산	1,153,676	40.2%	1,718,503	59.8%	2,872,179
	김 제	382,722	50.3%	378,220	49.7%	760,942
	남 원	416,459	47.4%	462,631	52.6%	879,090
	무 주	223,596	56.3%	173,692	43.7%	397,288
	부 안	407,642	59.2%	281,427	40.8%	689,069
	순 창	191,341	44.9%	234,839	55.1%	426,180
	완 주	436,493	44.2%	552,095	55.8%	988,588
	익 산	700,054	31.9%	1,495,042	68.1%	2,195,096
	임 실	164,539	55.3%	132,951	44.7%	297,490
	장 수	172,105	50.2%	170,899	49.8%	343,004
	전 주	2,547,963	39.9%	3,831,852	60.1%	6,379,815
정 읍	599,028	43.6%	774,822	56.4%	1,373,850	
진 안	184,477	58.9%	128,557	41.1%	313,034	
2024	전 북	10,685,349	37.2%	18,048,060	62.8%	28,733,409
	고 창	528,273	55.3%	427,042	44.7%	955,315
	군 산	901,745	24.9%	2,723,000	75.1%	3,624,745
	김 제	598,014	30.7%	1,349,652	69.3%	1,947,666
	남 원	625,356	46.6%	717,822	53.4%	1,343,178
	무 주	224,869	55.4%	181,099	44.6%	405,968
	부 안	285,889	36.0%	509,321	64.0%	795,210
	순 창	259,728	50.1%	258,764	49.9%	518,492
	완 주	901,849	50.6%	880,512	49.4%	1,782,361
	익 산	1,101,364	30.3%	2,539,007	69.7%	3,640,371
	임 실	132,054	42.7%	177,378	57.3%	309,432
	장 수	181,059	48.2%	194,425	51.8%	375,484
	전 주	3,808,284	35.3%	6,987,425	64.7%	10,795,709
정 읍	841,098	47.2%	939,639	52.8%	1,780,737	
진 안	295,767	64.5%	162,974	35.5%	458,741	
2025	전 북	7.6%	-	14.2%	-	11.5%
	고 창	7.3%	-	11.7%	-	9.2%
	군 산	-6.0%	-	12.2%	-	6.0%
	김 제	11.8%	-	37.4%	-	26.5%
	남 원	10.7%	-	11.6%	-	11.2%
	무 주	0.1%	-	1.0%	-	0.5%
	부 안	-8.5%	-	16.0%	-	3.6%
	순 창	7.9%	-	2.5%	-	5.0%
	완 주	19.9%	-	12.4%	-	15.9%
	익 산	12.0%	-	14.2%	-	13.5%
	임 실	-5.3%	-	7.5%	-	1.0%
	장 수	1.3%	-	3.3%	-	2.3%
	전 주	10.6%	-	16.2%	-	14.1%
정 읍	8.9%	-	4.9%	-	6.7%	
진 안	12.5%	-	6.1%	-	10.0%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내부자료

## 5) 소비자 인식<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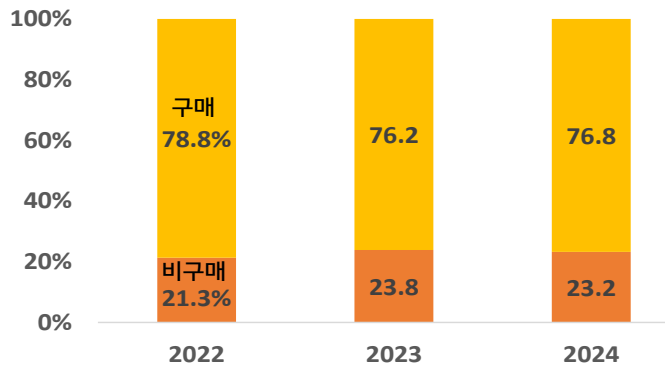
-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지도는 67.6%인 가운데 과거(2022년) 73.3%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유기농산물(57.8%)과 무농약농산물(58.3%)보다는 인지도가 높음



출처 : 2024년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 조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림 2-1]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지도

- 2024년 최근 구매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76.8%가 '구매한 적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과거 2022년(78.8%)과 2023년(76.2%)의 응답률과 비슷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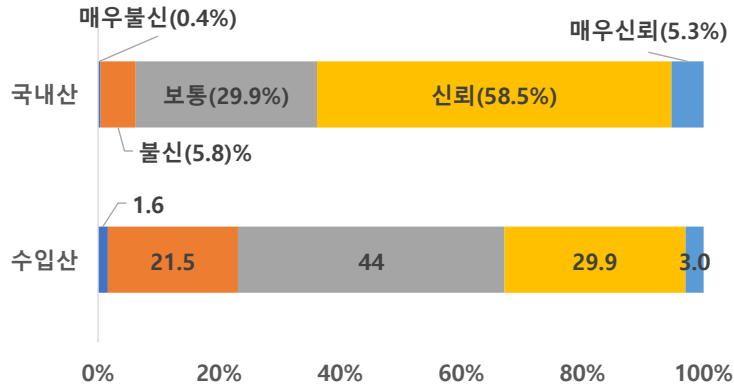


출처 : 2024년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 조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림 2-2] 최근(1년 이내) 친환경농산물 구매경험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 조사'를 토대로 재구성함. 해당 조사는 전국 소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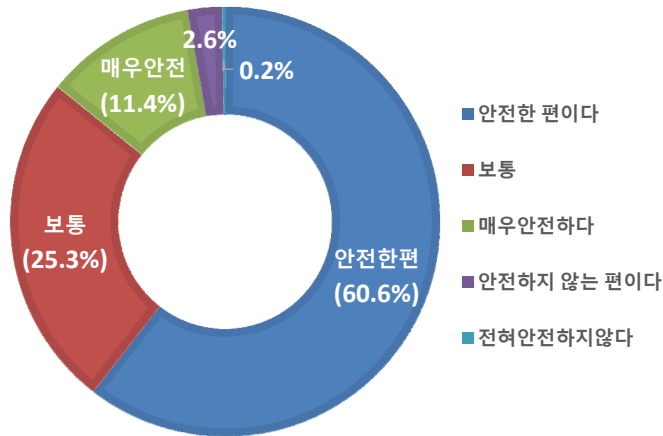
- 2024년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에 신뢰하는 응답자는 63.8%로 나타난 반면, 수입산은 32.9%에 불과해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출처 : 2024년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 조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림 2-3] 2024년 국내산 및 수입산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성 수준은 72.0%가 안전하다고 응답해 소비자는 대체로 친환경농산물을 안전하다고 인지하고 있음



출처 : 2024년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 조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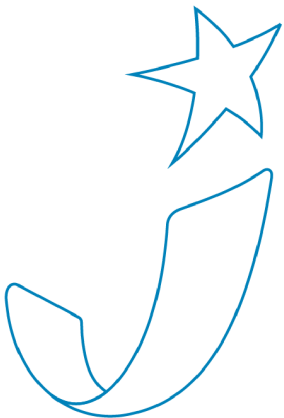
[그림 2-4] 2024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 제3장

### 전북자치도 친환경농업 현황 진단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및 시사점





# 제3장 전북자치도 친환경농업 현황 진단

## 1.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 전북자치도의 친환경농업 현황에 대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진단을 위하여 주요 주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자문회의 방식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
- 친환경농업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의 핵심 관계자를 선정하여 분야별 주요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방향과 정책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

### 2) 조사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제6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 위원
  - 행정(도/시·군 업무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민간단체(전북친환경농업협회,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북농협 지역본부), 전문가(연구기관, 진흥기관) 등으로 구성
- 친환경농업 정부정책 기반 대응 전략 도출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그룹
  - 행정(연구개발, 기술보급, 정책지원 분야), 지원기관(공공급식, 인증 분야), 소비자단체(모니터링, 교육·교류 분야 등), 농업인단체(전국·광역조직, 유통사업 분야), 전문가(선행연구자) 등으로 구성

### 3) 조사내용

- 친환경농업 주요 분야별 자문 및 의견수렴
  - 친환경농업 생산, 인증, 유통, 소비, 환경농업, 지원체계 등
-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평가 및 대응방향
  - 제5차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등 추진정책에 대한 평가

- 
- 제6차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등 정책의 개선방향 제안
  - 정부정책에 대응한 지역농업 전략 및 과제
    - 농업환경 개선 : 관련 인프라 및 제도, 기술 개발 및 보급, 탄소감축, 경축순환 등
    - 친환경농업 육성 : 생산기반 확충, 공공수요 및 소비 확대, 인증제도 개선, 점검·관리 등

## 2. 조사결과

### 가. 생산 및 인증 분야

#### 1) 농가 실천을 위한 인식 전환 필요

- (농가 갈등과 친환경 자재에 대한 불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인근의 관행 농가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드론으로 친환경 방제를 하더라도 일반 농약사용을 요구하는 등 불만을 토로
- (제초 문제 해결의 어려움) 논두렁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마을을 선정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3년간 시행했으나 일부 농가가 다시 제초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마을단위 노력만으로는 제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
- (일반농가 친환경방제 참여 인센티브) 친환경단지 인근의 관행 농가에도 친환경 방제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적정한 가치 인정)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도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주민 갈등 등으로 쉽게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
- (농업인 인식 문제) 친환경농업을 높은 강도의 농업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 농산물 대비 가격 차별성이 크지 않아 '돈이 안 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임

#### 2) 신규 진입 농가 확보 과제

- (신규 진입농가 확보 과제)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인데 신규 농가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귀농·청년농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미래세대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인식됨
- (인센티브 지원 필요) 로컬푸드 농가들도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이 친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며, 신규 농가들이 친환경에 강점을 인지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
- 진입보다 유지 관리가 중요하며, 1~2년 해보고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

- (기존 농가의 유기 전환) 친환경농업 면적 중 유기농은 소폭 늘고 있지만 무농약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무농약 농가들이 상위 단계인 유기농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무농약 농가 직불금 연장) 소득보전의 일환으로 무농약 인증 농가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8년(국비 3년, 도비 5년)에서 5년을 추가해 총 13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새로운 농가 유입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
- (직불금 지원제도 개선)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 처음 진입하는 농가(3~6년차)에게 가장 많이 지원하고, 6년 이상이 되면 줄이되 유기농으로 전환할 경우 다시 늘려주는 단계별 차등지원을 제안
- (청년농업인 중심 지원) 고령 농가가 신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여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
- (귀농·귀촌 유입 인구 지원) 남원의 사례처럼 귀농·귀촌 인구는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귀농·귀촌학교 커리큘럼에 친환경교육을 연계하여 신규 농가를 확보하는 방안 등 고려
- (스마트온실 토경재배 지원) 신규 진입 농가는 자금 회전이 빠른 품목을 선호하므로 스마트온실을 임대·지원할 때 양액재배가 아닌 토경재배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급식 장려 품목을 한정하여 정책효과를 높이는 전략 필요

### 3)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대책 확대

- (생산비 절감 대책) 농가들이 비용 문제를 가장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인증, 농자재, 분석 등 경비를 100%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
- (논두렁 제초기 공급) 농가의 제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논두렁 제초기 공급을 신규 사업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 추진
- (소규모 기계 지원) 노동력 절감을 위해 소규모 단위로 쓸 수 있는 친환경농업 전용 스마트 소형 기계를 개발해 보급하고, 유기농업에 필수적인 녹비 활용 기계 등 지원

#### 4) 친환경농업 집적화 및 공동영농 활성화

- (인력 문제 대응 조직화 전략) 친환경 농가는 고령화로 인해 실제로는 계속 줄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접근할 때 한계가 많아 마을영농 등과 연계한 조직화 및 접근성 제고 방안 등 고려가 필요
- (농지 집단화를 통한 확대) 개별적인 인증 농가 확대가 어려운 환경에 있으며, 농지가 집단화돼 있을 때 친환경농업 미실천 농지를 고령화 등으로 발생한 유휴농지를 법인이나 조직이 임대 또는 매매해 확대하는 방안 제시
- (단지화 및 광역화 추진) 친환경농업은 농약 비산에 취약하므로 단지화를 적극 권장하며, 광역화를 전제로 정책사업을 지원할 경우 면적 확대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
- (휴경지 활용) 유휴 농경지가 친환경 인증 요건(휴경 기간 3년)에 맞춰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신규 농업인이 친환경 필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휴경지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농가 진입을 유도할 수 있으나 토지주의 관리 불편 해소와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이 전제되어야 함
- (친환경단지 공동영농 활성화) 정부가 추진하는 마을영농작업단 사업을 친환경단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공동영농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의 기계화 및 인력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판단됨
  - 영농작업단에 임대해주는 주변 농가들이 일반 직불금을 받게 하여 소득이 줄어들지 않게 보장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 고령화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전략 고려

#### 5)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 (과정 중심의 지원 필요)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확대되지 않은 이유는 결과 중심의 지원방식 때문이며, 농가들이 인증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비료를 쓰지 않는 등 친환경농업의 실천과정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인증체계 효율성 제고) 탄소중립 직불제와 같은 맥락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보

---

존하기 위한 정책적 통합이 필요하며, 저탄소(2년 인증)와 친환경(1년 인증) 농산물 인증체계의 혼란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등이 요구됨

## 6) 인증면적 감소와 대책 마련

- (인증 포기 농가 증가)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및 면적은 줄고 있지만 신규 진입 농가 수는 꾸준하며, 주요 감소 원인으로 농가들이 자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과다 소요와 생산량 대비 판매량이 따라가지 못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일반농산물로 출하하는 경우가 많음
- (인증 삭제율 문제 대응) 친환경농산물 인증 삭제율이 높은 원인으로 비의도적 농약 비산 및 오염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현장 공유 및 협력을 통해 대응이 필요
  - 정부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정책을 위해 인접한 관행농법 농가의 비산으로 인한 즉시 인증 취소 대신 시정 명령으로 처리하는 등 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임

## 7) 유기농업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 전략

- (저탄소 인증 면적 확대) 친환경농업 정책 범위를 유기농업과 저탄소 농업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하되 저탄소 인증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여 탄소 저감과 직불금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하는 저탄소 인증 항목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직불금 보상을 확대할 경우 면적 증가 예상
- (벼 재배 유기농업 확대) 벼 재배는 유기농업 인증 면적을 늘리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작목이므로 단지 단위로 동반 작물 재배와 연계하여 면적을 늘려가는 전략 필요
  - 공공비축 수매의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정부가 계약재배 형태로 생산관리를 명시하여 친환경 벼를 수매하는 방식을 제안
- (공공비축 수매단가 현실화) 현재 정부가 일반 쌀 대비 친환경에 5% 정도를 더 주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최소 10% 이상(무농약 10, 유기농 15)을 요구

- (기술 및 품종 개선) 유기농업은 농약과 비료 배제 시 효과가 반감되어 농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기존 품종은 비료를 많이 요구하므로 유기농업에 적합한 내병성·내충성이 강한 품종으로 교체가 요구됨

## 8) 교육 및 기관 역할 개선

- (농업기술센터 역할 개선) 기술센터가 단순히 농약 사용법을 교육하는 수준을 넘어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을 교육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나. 유통 및 소비 분야

### 1) 학교·공공급식 공급 확대

- (도내산 학교급식 공급 확대) 현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이 전라남도 등 타 지역산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도내산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급식의 투명성 확보)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사용되고 있지만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도내산인지 단순히 국내산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지산지소 원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내 농가들의 소득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
- (공공급식 대상 확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급식만으로는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에 한계가 예상되며, 공급대상을 경로당, 병원, 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강화
  -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경우 농촌의 인구소멸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
- (공공급식 품목 확대) 소비를 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현재 쌀에만 지원되는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을 채소, 과일, 잡곡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 추진
- (친환경 농산물 품위 기준 마련) 현재 일반 농산물과 동일한 품위 기준이 적용되어 친환경농산물 공급과정에서 클레임 등에 취약한 상황이며, 친환경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 마련 및 인식 개선으로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품목 다양성을 확보

- 전주푸드가 공급업체와 함께 시식 및 상품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인식을 개선하고 있듯이 영양사를 초청해 친환경농산물의 품위 문제와 생산과정에 대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 고려
- (복지 급식 확대) 임산부 꾸러미 사업이 시장에 끼친 영향이 컸던 것처럼, 복지 급식이나 다른 형태의 꾸러미 사업 등을 계속 확대해야 함
- (친환경 가공분야 지원) 학교급식 등 공공분야에서 가공식품 비중이 높지만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품목의 다양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소스류 등을 제고해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
- (가공식품 조사 자료 활용) 영양사가 요구하는 소스, 김치 등 가공식품 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자료를 요청해야 학교급식에 대한 원활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가능함
-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학교급식에 출하하는 가공식품 사업자들과의 미팅 및 설문조사 자료 활용

## 2)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식재료 공급 한계

- (통합지원센터 연계의 어려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친환경 소품목을 확대 공급하는 계획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사계절 필요한 신선채소류는 저장성이 낮고, 농가들의 작부체계와 센터의 요구가 일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 (계약재배의 문제점) 친환경농산물 급식물량 확보를 위해 소수 농가에 다품목 재배 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계약재배 시 생산된 물량을 전량 수매하고 안 좋은 품목에 대한 부담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시군 간 조달 체계 미흡) 친환경농산물 생산량과 공공급식·민간소비 부분의 목표 설정이 부재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시군 간 잉여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지 못해 도내에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책 마련 필요
- 친환경농산물의 급식 공급률을 정확히 분석하고, 부족한 공급률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권역별 전처리센터 구축) 도내에 전처리 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며, 급식에 쓰이는 농산물의 품위와 조리원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로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센터를 만들어 가격 보장과 음식물 쓰레기 감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안

- (로컬푸드와의 관계) 로컬푸드 직매장의 가격 결정권은 농산물을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어 학교 급식에 낼 필요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 단가를 합리적으로 맞추줄 필요가 있으며 차액 지원도 현실화해야 함

### 3) 판로 확보 및 소비 촉진

- (소비 촉진 지원 확대) 일반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친환경농산물 구매할 유인력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바우처 등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비촉진 프로모션 확대)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를 확대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단골고객을 확보하는 마케팅 전략 필요
  - 농업인의 날 행사나 대규모 대회를 개최할 때 장터를 열어 농가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기회를 제공
- (온라인 판매 활성화) 온라인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배송비가 부담스러워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모션 진행 등 노력 필요
  - 도외 유통을 활성화하고 단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택배비 및 포장비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지원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어 유통 활성화에 어려움 발생
- ('친환경농산물 구매의 날' 이벤트)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 판매를 넘어선 전략이 필요하며, 매월 특정일을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 날'로 지정해 당일 구매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하거나 사은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 (농가-기업 상생형 모델)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즉석밥 시장을 새로운 유통채널로 활용해 지역기업인 하림 등에서 친환경 쌀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차액지원을 통해 농가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은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는 상생형 모델을 구축

### 4) 친환경농산물 전문 매대 설치 및 운영

- (도청 내 친환경 매대 설치) 도청 내 친환경농산물 전문 매대 설치 및 운영을 기획하였으나 인건비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 (농협 하나로마트 매대 설치) 전북농협에 친환경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하나로마트에 친환경 매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판매처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
- (물량 확보의 어려움) 친환경 전문 매대를 운영할 경우 안정적 물량(특히 채소류) 확보가 어렵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비교해 가격경쟁력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문제 등 해결방안 필요

## 5) 친환경농업 홍보 및 소비자 접근성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부재) 과거 대형마트에 친환경 매대가 별도로 있었고, 고가에도 건강을 위해 소비해야 한다는 교육과 홍보가 활발했으나 현재는 친환경농산물 별도 매대가 없어 일반 농산물과 혼재되어 판매되는 상황임
- (생협 활성화 및 급식 편중) 아이쿱이나 생협 매장이 활성화되면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가 이동했고, 일반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이 축소되면서, 공공급식으로만 친환경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음
- (일반 소비자의 접근성 하락) 일반 소비자들은 생협 등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 이상, 친환경 농산물을 쉽게 선택하고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음

## 6) 농가단위 지원 확대

- (물류비 지원 현황 및 한계) 순창군의 경우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게 40kg 포대당 1,000원의 물류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농가는 3,000~7,000원의 물류비를 요구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 (소규모 농가 판매지원) 소규모 친환경 농가들이 겪는 판로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익산시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택배비 및 포장비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7) 로컬푸드 시스템 진단 및 개선 요구

- (로컬푸드 친환경 전환 미흡) 로컬푸드 출하자들이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며, 완주 로컬 등 친환경 인증 받은 출하자는 10명~20명 정도에 불과함

- (소비분석 필요) 로컬푸드 생산량이 공공급식과 일반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공급되는지 실질적인 분석이 필요함

## 8)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방향이 농업인보다 소비자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하며,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환해 가야 할 것임

## 다. 환경농업 분야

### 1)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확대

- (직불금 단가 인상과 판매 보장) 직불금 단가를 전략 작물 수준으로 인상하고, 친환경농업 전환이 쉬운 벼 품목에 대해 공공비축 차액지원 등을 통해 판매를 보장해 주는 정책지원 필요
- (과수분야 직불금 인상)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수익성이 좋은 전략작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 인증면적 2배 확대를 위해서는 과수(최대 140만 원)의 직불금을 전략 작물 수준으로 인상하여 농가들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야 함
- (전략작물 직불사업 활용)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전략작물 직불사업 예산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해 활용하면 생산량을 줄이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늘리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2) 지역단위 순환농업 활성화 방향

- (가축분뇨 활용 순환농업) 단순히 친환경 인증에 머물지 않고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등 친환경농업이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로 발전하도록 추진

- (현행 사업진단 및 문제해결) 농업환경 개선 및 생태농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
  - 정해진 예산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컨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가축분뇨가 안정적으로 수집·보급되는 운영실태 진단이 우선 과제임
- (유기 축산 및 복합 영농) 경축순환 실현을 위해서 유기 축산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초지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복합 영농을 통해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등 정책적 검토가 필요

### 3) 유기농업 예방적 기술 지원 확대

- (영농 지원 프로그램) 농가가 자체적으로 경지 규모에 맞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재배 작목을 의사 결정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유기농업의 다품목 재배 특성을 고려하여 품종 및 출하 시기 조절에 활용함
- (예방적 기술 및 토양자원순환) 유기농업 자재의 효능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병해충을 미리 예방하고 처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토양 및 자원순환 차원에서 토양 상태에 따른 유기 자원 처방 기술을 벼 중심에서 밭작물로 확대함

### 4) 환경과 친환경 농산물 교육 확대

- (친환경농업 환경 교육 감소) 최근 들어 학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 관련 환경교육이 줄어들고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등 폭넓은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
- (친환경 농산물 교육 배제) 과거 친환경 농산물의 중요성에 대한 환경 교육이 포함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교육은 잘 다루지 않고 있음
- (소비자 인식 전환 중요) 최근 소비자들은 소비의 효율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의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중요하며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두 가지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함

- (친환경농업학교 운영) 신규 농가 진입 및 기존 농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협회가 주관하여 재배기술, 정책교육, 현장견학, 멘토-멘티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

## 5) 환경 부하를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

- (환경 부하 저감 중심의 정책 전환) 친환경농업 정책은 인증 농가 수나 면적 확대에 집중하기보다는 농업 전체의 환경 부하를 줄이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며, 탄소 중립 농업도 일반 농가들이 저탄소 농업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
- (시설원에 저탄소 기술 적용) 현재 벼에만 집중되어 있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시설원으로 확대하고, 도가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 높음
  - 농가들은 이미 탄소저감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저탄소인증 직불금 등 방안 마련 필요
-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추진) 도, 농협, 시군이 결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캠페인을 전개,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

## 라. 지원체계 분야

### 1) 관련 정책평가 및 지역현황 인식

- (농식품부 5개년 계획 평가) 계획의 방향은 좋았으나 실효성이 부족하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에서 혁신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친환경 실천농가는 절대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
- (정책 지원 부족 문제) 친환경농업 확대가 더딘 가장 큰 이유는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농가는 관행농업 대비 70% 수준의 수익밖에 얻지 못하는 현실에서 예산의 중요성은 정책이 제시하는 면적 확대 목표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정책방향과 예산 확보) 친환경농업의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학문적 정립과 활성화가

---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면적을 늘리기 위한 예산 증액과 정책의 패러다임 재구성이 가장 중요함

- (전북자치도 목표 설정) 농식품부의 '경지면적 대비 유기농업 2배 확대'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고, 실현하기 어려운 계획으로 판단되며,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보완적인 방향성을 먼저 설정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친환경농업 인프라 보유) 과거와 달리 수로와 모터 등이 잘 갖춰져 있어 물 조절이 쉬워지는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데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

## 2)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발전 필요

- (친환경농업 선도지역 역할 필요) 도내 친환경농업은 과거 군산시와 익산시가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순창군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
- (지역별 특성화 사업 육성) 평야와 산악 지대가 공존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책을 적용하기보다는 순창군이 밤을 특화했듯이 각 시군에 맞는 특화 사업을 개발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에 맞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야 함
- (시군별 전략품목 육성) 벼 외의 작물(특용작물, 채소류)은 도매시장에서 차별성 확보가 어려운 편이지만 시군 전략품목 중에는 시장교섭력이 높은 작목도 존재
  - 시군별로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육성한다면 단기적으로 면적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타 지역 벤치마킹 및 지원 확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전라남도의 경우 관련 예산이 더 많은 상황으로 획기적인 지원 확대와 적극적인 벤치마킹 전략이 요구됨
  - 전라남도는 도 차원에서 친환경 농가에 대한 인증 비용 및 직불금 보조 등에 지원을 높이고 있으며, 전북 농산물은 서울 학교급식 시장 등에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도 상대적 열위에 있음

## 3) 정책 대상 및 지원 범위 확대

- (친환경농업 지원대상 확대)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작물인 시설원에 작물까지 확대하여 농가의 실천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작목별 시범사업 확대 필요) 벼를 대상으로 중간 물 떼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

#### 4) 가격안정 대책 및 지원 확대

- (가격안정기금 조성 제안) 농가소득 지원을 위해 직불금 외에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매칭 사업이 필요하며, 익산이나 완주, 부안처럼 소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을 도내 모든 농가로 확대할 것을 제안
- (가격안정 지원사업 검토) 현재 9개 시군에서 약 29억 원 규모의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매칭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시군별 지원금액 차이가 많아 적정단가 산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
- (친환경 농업인 가점 부여) 친환경 농업인에게 시범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 5) 연구개발(R&D)을 통한 활성화 전략

- (신규 진입 및 고령화 대상 R&D) 연구개발에 있어 고령화와 신규 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하며, 스마트 첨단기술을 도입하되 관행적인 대규모 방식과 달리 유기농업 현장에 맞는 소규모·저비용 기술에 초점을 맞춰 추진
- (소규모·저비용 기술 개발) 소규모 농가가 경제적이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비용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농가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
- (가공품 개발 및 소비 확대) 생산된 유기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구가 미진했던 가공 분야에 집중해야 하며, 대규모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가공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수출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기획

#### 6) 정책의 지원체계 및 서비스 개선

- (유기복합서비스단지 활성화) 순창에 조성된 유기농 복합서비스단지는 광역차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군 자체 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생산자연합회나 소비자생협 등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소득 보장으로 전환 유도) 친환경농업이 더 나은 소득을 보장해야 농가의 이탈을 방지하고 전환을 유도할 수 있으며, 노동 강도가 높은 방제·제초 등 예산지원이 필요
- (재해보험 차등 지원) 벼 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일반 농산물과 똑같이 적용되어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재해보험 무상지원 등 우대 정책 등을 요구
- (사업목적을 고려한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축산물 비중이 높아 사업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도-수도권 전략품목 개발) 수도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쌀 등 우수 농산물을 친환경 농가들이 전략적으로 재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광역연합사업의 역량강화 지원 필요

#### 7) 실증모델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 (실증모델 구축)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 및 확산하기 위해서는 실증모델 구축이 중요하며,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시범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연구원, 농가, 기술을 연결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함
- (EU 프로젝트 사례) EU의 '유기 기운 넷(Organic G-Net)'처럼 여러 농가가 기술을 적용하고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도출하며, 농가 간 네트워킹을 통해 운영되는 시범농장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

## 8) 거버넌스 구성 및 계획이행 강화

- (계획이행 점검) 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별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거버넌스 운영)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칭)' 등에 적극 참여하고, 도내 주요 관계자들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을 현실화
- (농협의 역할과 참여 확대) 농협에 친환경 담당부서가 없어 실무 협의에 어려움이 많고, 친환경 관련 사업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

---

### 3. 소결 및 시사점

#### 1) 구조적 위기의 심화

- 친환경농업은 인증 농가 및 면적의 지속적 감소, 신규 진입 부진, 판로 부족, 소비자 인식 저하, 정책 지원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생산, 유통, 소비, 지원체계 전반에 걸쳐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관행농업 대비 낮은 수익성, 높은 노동력 부담, 불안정한 판로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업 포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2) 생산기반의 취약성

- 고령화와 신규 진입 부족은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1~2년 실천 후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 진입보다 유지가 더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생산비와 노동력 부담이 과중하고, 제초·방제 등 핵심 영농활동의 어려움이 실천과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 개별 농가 중심의 정책적 접근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친환경농업의 집적화 및 조직화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 등 개선이 과제로 제기됨

#### 3) 유통·소비 구조의 문제

- 학교급식 중심의 소비구조는 학생 수 감소로 한계에 직면했으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학교급식지원센터)의 도내산 식재료 수급기능이 미흡해 타 지역산 농산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일반 소비자 대상 유통채널이 생협 등 회원제로 한정되면서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소비자 교육과 홍보가 축소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도 약화되는 추세임
- 온·오프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포장비 지원이 감소하고,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해 보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4) 정책지원의 한계

-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를 차지
- 직불금 단가가 전략작물에 비해 낮아 농업인들의 전환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부족하고, 공공비축 수매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시설원예 등 고부가가치 작물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나 예산 제약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군별 지원금액 편차가 커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5) 기술지원 및 교육체계 미흡

- 농업기술센터가 관행농업 중심의 기술보급에 머물러 있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역할 전환이 요구됨
- 유기농업 자재의 낮은 효능을 보완할 예방적 기술 개발이 미흡하고, 소규모·저비용 기술 개발이 부족하여 고령농과 규모가 영세한 농가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학교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이 축소되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수단도 줄어들고, 신규 진입 농가를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도 부재한 상황

#### 6) 지역별·품목별 전략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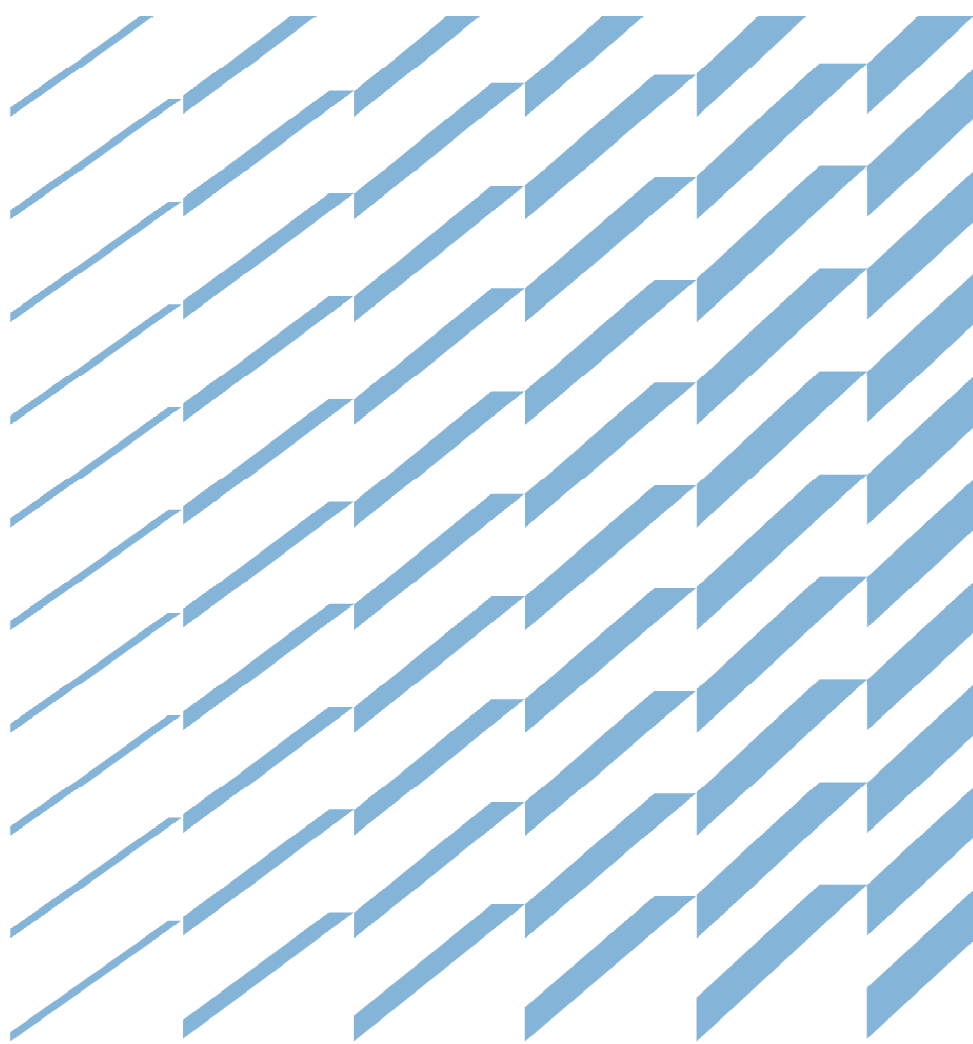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이 미흡하고, 시군별 전략품목 육성 및 특화 사업과 연계한 친환경농업 육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벼 중심의 정책 지원으로 인해 채소, 과수 등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 전환이 지체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등 타 지역과 경쟁에서 가격경쟁력과 지원 수준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7)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부재

- 친환경농업 계획 수립 후 이행 점검 체계가 미흡하고, 도-시군 간 협력체계가 취약하며,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생산자-소비자-지원기관 간 네트워크가 약하고,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등 기존 인프라가 광역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연구-기술-현장을 연결하는 실증 및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함

## 8.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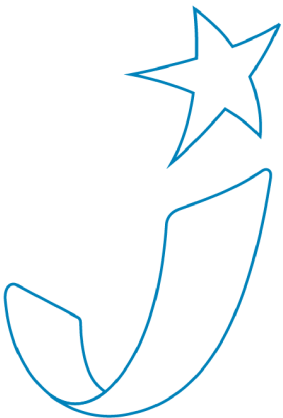
- 친환경농업이 단순한 양적 확대 정책으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렵고, 생산-유통-소비-지원체계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단기 성과 중심에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재설정할 것을 요청
- 면적 확대 중심에서 환경부하를 줄이는 데에 정책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
- 친환경 인증에 대하여 결과 중심에서 실천 과정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과 탄소중립 농업, 저탄소 농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
-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확대와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요청함
- 특히 예산 확보와 직불금 현실화, 공공비축 수매단가 인상, 물류비 지원 확대 등 실질적 소득 보장 대책 등이 선결과제로 제기됨
- 집적화·조직화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 유통 인프라 구축,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 연구-기술-현장을 연결하는 지원체계 등이 정책과제로 도출됨



## 제4장

### 전북자치도 친환경농업 대응 전략

1. 정책목표
2. 추진전략
3. 중점과제





## 제4장 전북자치도 친환경농업 대응 전략

### 1. 정책목표

#### 가. 비전 및 목표

##### 1) 비전 : 생산부터 소비까지 지속가능 친환경농업 생태계 구축

- 정부정책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이 강조하는 환경과 조화, 지속가능 농업 키워드에 전북자치도가 추구하는 현장 중심의 가치를 결합
- 친환경농산물 면적 확대를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책추진의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 설정
- 수요 기반의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를 확대하고, 농업환경 보존과 지역 내 순환체계를 통한 통합적인 생태계 구축을 강조

##### 2) 목표 : 친환경농업 면적 확대와 농업환경 보전 목표 설정

###### ■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인증 면적 확대

- 정부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24년 대비 2배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인증면적 2배 확대 목표를 설정함
-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 ('24) 1.5% → ('30) 3.0%
- 무농약농산물 인증면적 : ('24) 1.1% → ('30) 2.2%

---

## ■ 농업환경 보전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는 2030년 화학비료 사용량을 '24년 대비 2.6%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함
-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감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농토 배양 및 환경 부하 저감을 위한 목표를 설정함
- 화학비료 사용량 : ('24) 248.1kg/ha → ('30) 241.7kg/ha

## ■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확대

-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 등 공공수요 비중을 확대함
- 공공(학교)급식 영역의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 노력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률(금액 기준) : ('24) 62.8% → ('30) 71.4%
  - 2020년부터 2024년까지(5개년) 공급률의 연평균 성장률 1.4%p를 적용하여 2030년 목표치 산출

[표 4-1] 전북자치도 친환경농업 대응 전략

비전	생산부터 소비까지 지속가능 친환경농업 생태계 구축		
목표	<p>■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인증 면적 확대 -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유기/무농약) : ('24) 1.5/1.1% → ('30) 3.0/2.2%</p> <p>■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화학비료 사용 감축 - 화학비료 사용량 : ('24) 248.1kg/ha → ('30) 241.7kg/ha</p> <p>■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확대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률 : ('24) 62.8% → ('30) 71.4%</p>		
추진 전략	(1) 친환경농업 생산역량 강화	농가소득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농업직불제</li> <li>친환경 유기농업 육성</li> </ul>
		생산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농업자재 지원</li> <li>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li> <li>친환경 벼 생산관리 지원</li> </ul>
		집적화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농업 기반구축</li> <li>친환경쌀생산단지 조성</li> <li>쌀 경쟁력 제고사업</li> <li>친환경 특성화농업지구 지정</li> </ul>
		전문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li> <li>친환경농업인대회 지원</li> </ul>
	(2) 수요 기반 유통·소비 구조 개선	공공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li> <li>친환경쌀 어린이급식 지원</li> <li>친환경쌀 소비 촉진 지원</li> <li>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li> </ul>
		공급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li> <li>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지원</li> </ul>
		수요 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li> <li>소비자 교육 및 교류 활동 강화</li> </ul>
		홍보·마케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li> <li>친환경유기농 박람회 참가</li> <li>저탄소농산물 홍보 판촉 지원</li> </ul>
	(3) 친환경 인증 안전성 강화	인증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 지원</li> <li>GAP 안전성 분석 지원</li> </ul>
		안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급식 농수산물 안전관리지원</li> <li>중소농 농산물 안전 지원</li> </ul>
	(4) 농업환경 순환체계 구축	농업환경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li> <li>농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확대</li> <li>노지 스마트팜 및 정밀농업 시범사업</li> </ul>
		친환경 기술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생물 농자재 생산 및 보급 확대</li> <li>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 및 보급</li> </ul>
		탄소중립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li> <li>저탄소 농축산물 인증</li> </ul>
		자원순환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부산물 자원화 및 영농폐기물 관리 강화</li> <li>가축분뇨 자원화 및 경축순환 활성화</li> </ul>

---

## 2. 추진전략

### 가. 친환경농업 생산 역량 강화

- 전북자치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은 최근 5년간(19~23) 농가수 14.8%, 면적 12.3%, 출하량 29.9% 감소하는 등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
- 고령화에 따른 신규 진입 부족, 관행농업 대비 낮은 수익성, 생산비와 노동력 부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진입보다 유지가 더 큰 과제로 인식되는 상황임
- 정부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26~30)은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목표로 직불금 확대, 유기농업자재 지원 확대, 집적화 및 조직화 강화, 인력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였음
-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농가의 소득 보전 강화, 생산비 절감, 집적화를 통한 규모화, 전문인력 육성 등 친환경농업의 생산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방향 설정이 중요

#### ■ 친환경농업 직불금 확대를 통한 소득보전 강화

- 국비 직불금 지원이 종료된 무농약 인증 농가에 대해 도비로 5년간 추가 지원하고, 유기농은 무기한 지원(유기단가의 40% 수준)하여 관행농업으로의 회귀를 방지
- 농가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 처음 진입하는 농가(3~6년차)에게 가장 많이 지원하되 유기농 전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계별 차등지원 체계를 구축

#### ■ 환경친화형 자재 지원을 통한 생산비 부담 경감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을 확대하고, 논두렁 제초기 등 소규모 기계 보급을 통해 노동력 절감을 도모
- 유기농업에 필수적인 녹비 활용 기계와 친환경농업 전용 스마트 소형 기계를 보급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

## ■ 친환경농업 규모화 및 조직화 전문단지 조성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 및 특성화농업지구 지정을 통해 규모화·조직화를 촉진하고, 집단화된 생산·유통 단지에 시설·장비, 농지 임대차 허용 등 활성화 지원을 강화
-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유기농업단지 조성, 농생명산업지구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용복합산업(남원 ECO 스마트팜, 고창 김치특화, 진안 홍삼한방 등) 육성 거점을 마련

## ■ 신규 농가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지원

- 귀농·귀촌 인구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교육을 연계하고, 로컬푸드 농가 중 젊은층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규 진입을 유도
- 스마트온실 임대 시 토경재배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신규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존 농가의 노하우를 전수
- 친환경농업협회 주관의 재배기술, 정책교육, 현장견학 등을 제공하는 친환경농업학교 운영 등 전문인력 육성 체계를 강화

## 나. 수요 기반 유통·소비 구조 개선

-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소비처는 학교급식에 집중되어 있으나 학생 수 감소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한 안정적 판로 확보 등 대응이 요구됨
- 현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중 외부 유입 비중이 높고, 친환경 소품목 수급과 품위 기준 등으로 농가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며, 시군 간 조달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됨
- 정부는 공공급식 중심의 실수요 확대(임산부 지원, 녹색제품 지정, 공공비축 등)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와 연계한 수요 기반 확충 전략을 통해 강화
- 일반 소비자에 대한 유통채널이 단순해 접근성이 저하되고, 교육과 홍보 축소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도 약화되는 추세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통한 안정적 수요처 확대

- 도내산 친환경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차액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유·초·중·고·특수)과 어린이집 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확대
-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수요처를 확대하고, 친환경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경로당·음식점·병원·가공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친환경쌀 구입비 일부를 차액 지원
- 현재 쌀 중심인 지원을 채소·과일·잡곡 등으로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재개하여 생애주기별 소비기반을 강화

## ■ 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도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조달체계 구축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역량을 강화하고, 과수류·채소류 등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한 생산·유통 관리 시설·장비를 지원
- 광역단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요처 발굴 및 공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농산물 품위 기준과 생산과정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과 품목 다양성을 확보
- 공공급식·학교급식 조리환경과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도내산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

## ■ 소비자 교육 및 교류 활동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인식 제고

- 학교·지역아동센터·주민센터·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시행하고, 친환경농업 교육 강사 양성 및 소비자 리더(서포터즈) 양성 과정을 운영
- 친환경 학교 텃밭체험, 농장 체험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 등 생산자-소비자 직접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과 판로 확대를 추진
-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후기·사진 공모전 등), 친환경유기농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강화

## 다. 친환경 인증 안전성 강화

- 전북자치도는 2024년 기준 인증농가 3,439호, 면적 4,922ha로 전국의 7.1%를 점유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인증 편의성 제고, GAP·저탄소 인증과 연계, 안전성 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 등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
- 정부는 과정 중심의 인증제도 강화를 목표로 선의의 친환경농업인 피해 방지와 소비자 신뢰 유지, 불필요한 인증절차와 과도한 입증책임 완화, 친환경·저탄소 인증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
- 드론 방제에 의한 비산, 기후변화 등 불가항력 요인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기준 도입, 인증마크 체계 개선 등 정부정책 강화에 대응
- 친환경단지 인근 관행농가에게 친환경 방제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 마련

### ■ 친환경 및 저탄소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 친환경농산물과 저탄소 인증 심사·검사비,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분석, 안전성 검사 비용 등을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
- 친환경 인증 농가의 저탄소 인증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친환경, 저탄소, GAP 인증 간 연계 추진을 강화

###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 강화를 통한 신뢰 제고

- 공공급식에 공급하는 도내산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재료 조달체계를 구축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역량을 확보

## 라. 농업환경 순환체계 구축

-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함께 농업환경 보전을 정책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
- 주요 정책으로 토양검정·시비처방 확대, 노지 스마트팜 및 정밀농업 확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개편, 미생물 농자재 보급, 저탄소 농업 유인체계 구축, 가축분뇨 자원화 및 경축순환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
- 전북자치도는 제5차 계획 실행을 통해 화학비료를 9% 감축과 저탄소농업 인증농가 대폭 확대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현장에서는 인증 농가 수나 면적 확대보다 농업 전체의 환경 부하를 줄이는 방향의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
- 따라서 농업환경을 보전과 지역단위 자원순환을 기반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농업을 강화해 가는 전략을 추진

### ■ 농업환경 보전 지원체계 확대

- 마을단위 농업환경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토양·용수·경관·생태 등 농업환경 개선 활동을 지원하되 저투입농법 등 환경친화적 전환을 촉진하도록 개선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을 확대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지 스마트팜 및 정밀농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체계로 전환을 추진

### ■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 친환경 방제 기술 보급과 미생물 농자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화학농자재에 대한 의존도 낮추는 등 지원을 확대
- 벼와 과채류 중심으로 핵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모델(천적, 미생물제, 식물추출물, 물리적 방제 등)을 구축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

---

### ■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물관리, 바이오차, 가을길이, 적정시비 등)을 지원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농업을 장려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활성화를 통한 환경친화적 농업 활동 확산을 유도

### ■ 가축분뇨 자원화 및 경축순환 활성화

- 지역단위 가축분뇨 자원순환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가축분뇨 발생량과 퇴비화 사용량 등을 분석하여 화학비료 감축과 분뇨 재활용 체계를 마련
- 경종농가-축산농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퇴비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영농부산물·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를 통한 농업환경 보전

---

### 3. 중점과제

#### 가. 친환경농업 생산 역량 강화

##### 1) 농가소득 보전

######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 보전으로 친환경 농업 확산 및 농업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사업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무농약은 3년, 유기는 5년간 직접지불금(국비/기금) 지원

###### ■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 (사업목적)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농업인에 대한 경영비 부담 경감 및 관행농업으로 회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사업내용) 국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이 종료된 무농약 인증 농가에 5년간(5회), 유기 지속 무기한 지원(유기단가의 40% 수준)
- (기대효과)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인증 이후 유기농업으로 단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2) 생산비 절감

###### ■ 유기농업자재 지원

- (사업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환경오염 저감 및 유기농업 확산
  - 추진근거 :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
- (사업내용)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 등 지원, 연간 3,176ha 이상

### ■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사업목적)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현실을 고려해 페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친환경농업 활성화 제고

- 추진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

- (사업내용)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 방지용 매트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지원, 연간 1,026ha 이상

### ■ 친환경 벼 생산 및 관리 지원

- (사업목적) 친환경 벼 재배에 필요한 장비 지원을 통해 제초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증대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제5조

- (사업내용) 친환경 벼 재배에 필요한 중경제초기 및 이앙기 등 구입비 지원

## 3) 친환경 집적화 단지

###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 (사업목적)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규모화 촉진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에 기여

- 추진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1호

- (사업내용) 친환경농업지구를 관리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집단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단지·지구 매년 1개소 지원

### ■ 쌀 경쟁력 제고사업

- (사업목적) 관세화 전면 시행에 대응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의 생산 및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제고

- (사업내용) 17개 사업 추진(생산비 절감 7, 품질고급화 9, 우수브랜드쌀 육성 1)
  - 지원분야 :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우량종자재종포, 농업용 방제 장비, 소규모육묘장, 곡물건조기, 친환경쌀 생산단지,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벗짚환원, 마케팅 등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작목반 등

## ■ 친환경 특성화농업지구 지정 및 조성

- (사업목적) 친환경농업에 특화되어 조직화를 통해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 농식품부 계획과 연계 추진
- (특화지구) 농촌특화지구 내 '친환경농업 특성화농업지구' 지정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농지 임대차 허용, 유기농업자재지원 등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여 선도모델 육성 및 확산
- (특화단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유기농업·조사료단지 조성('28), 친환경 공공농지 확대 등 친환경 공급기반을 단지화하도록 추진
  - 새만금 기본계획('21)에 반영된 계획으로 정부의 친환경농업 강화 정책기조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운영 등 지원
- (지역특화) 「전북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하여 친환경농업의 특화발전을 위한 특례 발굴, 농생명산업지구와 연계하여 지역에 특화된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 육성 등 추진
  -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 : 대규모 창업단지와 스마트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복합단지 조성
  -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 인근 지역을 연계한 연중 안정적 김치 원료 공급체계 구축, 김치산업 복합단지 조성 등 추진
  -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 : 홍삼특구를 토대로 유통, 가공, 홍보·체험 등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
  - 장수 저탄소한우 산업지구 : 저탄소 증축·사료 기술 개발, 사양관리, 도축·가공시설 첨단화 등 지역단위 저탄소 축산 산업화 모델
  - 순창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 미생물과 발효기술 기반의 융복합산업 육성, 지식산업센터, 혁신벨트, 산업용 미생물 공급망, 실증지원시설 등 연계 고려

#### 4) 전문인력 육성

##### ■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

- (사업목적)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농가수 감소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신규 인력 확보
- (사업내용) 친환경농업 선도농가(멘토)를 지정하고, 친환경 창업 및 전환을 희망하는 신규 농업인(멘티)에 대하여 멘토링 코칭 비용을 지원
  - 멘토에게 1인당 월 400천원 한도로 수당을 지급(연 최대 9개월)하고, 멘티에게도 1인당 월 120천원 한도의 사업참여 수당을 지급(연 최대 9개월)
- (기대효과)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 및 경영 역량 지원으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신규 농가를 확보

##### ■ 전북 친환경농업인대회 등 지원

- (사업목적) 친환경농업인의 네트워크 형성 및 재배기술, 유통정보 등 공유를 통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견인
- (사업내용) 매년 전북친환경농업인대회 개최, 친환경 활성화를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 친환경농산물 소비판촉행사 등 지원
- (기대효과)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 등 당사자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네트워크와 역량강화에 기여

## 나. 수요 기반 유통 및 소비 개선

### 1) 공공수요 확대

####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사업목적)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 제공으로 심신발달 도모 및 친환경농산물 확대 공급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친환경농업 활성화 견인
  -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내용) 도내산 쌀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차액 지원
  - 지원대상 : 2026년 기준 181,879명(유 15,501, 초 70,728, 중 47,058, 고 47,326 특수 1,266)
  - 지원규모 : 2026년 기준 유) 1,049,421천원, 초) 4,356,964천원, 중) 3,830,279천원, 고) 3,618,696천원, 특) 96,305천원
- (시행주체) 광역과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

#### ■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 지원

- (사업목적)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발달 도모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대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내용) 도내산 쌀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일부를 차액지원
  - 지원대상 : 2026년 기준 11,660명(도내 희망 어린이집)

#### ■ 친환경쌀 소비 촉진 지원

- (사업목적) 도내산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기반으로 친환경농업 면적을 확대하고, 농가소득을 제고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제5조

- (사업내용) 도내 경로당, 음식점, 병원, 가공업체 등에서 구입 및 사용하는 도내산 친환경쌀 구입비의 일부를 차액 지원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사업목적)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등 사회적 가치 제고와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대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제5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의2
- (사업내용) 도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도내 임산부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연간 2,700명 이상)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2) 공급체계 개선

#### ■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 (사업목적)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보완으로 학교급식 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로컬푸드와 연계한 학교급식 공급기반 구축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사업내용) 학교급식 공급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시설(저온창고, 소포장실, 창고 등), 장비(냉장탑차, 지게차, 콤프레샤, 절단기, 팔레트 등)
- (추진방식) 공보를 통해 도내 학교급식지원센터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

#### ■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지원

- (사업목적)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과수류·채소류를 중심으로 다양한 품목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 (사업내용) 과수류·채소류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 관리 시설·장비 등 지원

### 3) 수요 기반 확대

#### ■ 친환경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

- (사업목적) 도내산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하고, 수요처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
- (사업내용) 도내산 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 공공급식·학교급식을 중심으로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활용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
  - 공공급식 조리환경 및 식단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수요 반영(반조리·즉석섭취·착즙쥬스 등)
  - 주요 제조업체와 수요처(학교급식지원센터·영양사 등) 협력을 통한 주요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요처 발굴 및 친환경 가공식품 공급체계 구축 등 효율화 추진

#### ■ 소비자 교육 및 교류 활동 강화

- (사업목적)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생산자 교류를 통한 신뢰를 높이고, 수요 기반 유통·소비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태계 구축
  - 소비자 인식 제고 : 친환경농산물의 가치(환경보전, 건강,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
  - 생산-소비 연결 강화 :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 및 판로 확대
  - 지역 브랜드 강화 : 도내산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조성 : 환경과 조화되는 소비 습관 형성 및 친환경농업 지지층 확대
- (사업내용) 소비자 대상 친환경농업·친환경농산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류 형태의 프로그램 등 운영
  - 찾아가는 친환경농업 교육 : 학교,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기업 등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환경적·사회적 가치, 인증제도와 안전성 관리, 친환경농산물 선택과 소비 실천 방법 등 교육
  -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 친환경농업 교육 강사 양성 과정, 소비자 리더(서포터즈) 양성 및 활동 지원

#### 4) 홍보·마케팅 강화

##### ■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

- (사업목적) 친환경농업 우수단지 중심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여 대도시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소비처 확보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 (사업내용) 친환경농업과 도농교류 활동이 우수한 시군을 선정하여 유통 및 소비 분야 홍보·마케팅을 지원
  - 친환경 학교 텃밭체험 :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 내 친환경 텃밭 조성 및 체험 활동 운영(스쿨팜 등)
  -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수요맞춤형 체험활동 자율 운영 지원
  - 친환경농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농업 전문농장 방문, 수확 체험, 농업 현장 견학 등
  - 친환경농산물 요리 프로그램 :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활용 요리 프로그램, 경영대회 개최
  - 친환경농업 홍보 및 캠페인 :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후기 공모전, 사진 공모전 등) 등 개최

##### ■ 친환경 유기농박람회 참가 지원

- (사업목적) 친환경유기농산물·가공식품 관련 국내외 선진 정보를 습득하고, 판로개척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전문성을 강화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제5조제1항제1·5·6호
- (사업내용) 친환경 유기농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 임차료 및 설치·운영비,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추진방식) 도내 친환경농산물 관련 생산자단체, 유통조직·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

##### ■ 저탄소 농산물 홍보·판촉 지원

- (사업목적) 도내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으로 소비자들의

-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경쟁력 향상 등 소비를 촉진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제5조의2
- (사업내용) 저탄소 인증 농산물 홍보를 위한 판촉행사 및 상품화 등 지원
  -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추진

## 다. 친환경 인증 및 안전성 강화

### 1) 친환경농산물 인증 고도화

####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 (사업목적)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가부담을 경감
- (사업내용) 친환경 농산물·가공식품·취급자 및 저탄소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심사·검사비 등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친환경농산물 440천원/건,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1,000천원/건, 취급자 550천원/건, 저탄소인증 4,000천원/건

#### ■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 (사업목적) 농산물우수관리인증(Good Agricultural Practices)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인증획득 농가수 확대를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
  - 추진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제1~8호
- (사업내용) GAP 인증 절차에 필수적인 토양·용수 분석, 안정성 검사 등 소요 비용을 농가에 지원

## 2)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

### ■ 공공급식 농수산물 안전관리 지원

- (사업목적) 공공급식에 공급하는 농수산물의 출하 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도내산 농수산물의 신뢰도 제고 및 지속가능한 식재료 조달체계를 강화
  - 추진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내용) 도내외 공공급식에 공급하는 지역 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비를 연간 1,444건 이상 지원

### ■ 중소농 농산물 안전 지원

- (사업목적)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역량을 확보
  - (추진근거)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내용)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을 대상으로 사전 잔류농약검사비를 연간 1,555건 이상 지원

## 라. 농업환경 및 순환체계 구축

### 1) 농업환경 보전

#### ■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 (사업목적) 마을단위 농업환경 관리 및 추진 등을 통해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개선
  - 추진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제2항
- (사업내용)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마을을 대상으로 관리계획 수립, 토양·용수·경관·생태 등 농업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

- (개편방향) 저투입농법 등 확산을 통해 환경친화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개편 예정
  - 타 사업과 중복활동 제외, 농업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개인활동의 최소 참여 비율 및 면적 확대, 상한액 폐지 등 사업 개편
  - 개인활동 중 저탄소 활동(물관리, 바이오차, 기열갈이) 제외하고, 공동활동은 환경개선 효과가 뚜렷한 용수·생태·생활 분야로 축소 운영

### ■ 농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확대

- (사업목적) 화학비료 사용량을 적정수준으로 줄이고, 친환경농업 기반인 토양 건강성 회복과 양분 불균형 해소를 통해 고품질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 과학적 진단에 근거한 맞춤형 시비로 과도한 사용을 줄여 수질오염 및 토양염류 집적을 방지하고, 환경부하를 줄이는 농업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 (사업내용) 토양검정 분석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하고, 농업인 대상 기술 보급 및 교육 등 연계 추진
  - 정부의 추진계획과 연계해 친환경 인증 및 전환 농가, 친환경 집단화단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
  - 검정 결과에 대한 시비처방서 발급 및 이행에 대한 컨설팅 지원, 농업인교육 등 연계 추진
  - 정기검정 문제 포장에 대한 수시 검정 병행, 검정 결과 D/B 구축 및 토양지도 작성

### ■ 노지 스마트팜 및 정밀농업 시범사업

- (사업목적) 기상 리스크, 노동력 감소 등 노지 친환경농업의 한계를 해소하고 생산성·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및 기술 지원
  - 노지 관행농업을 데이터기반의 스마트농업 체계로 전환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행역량을 강화
- (사업내용) 전복의 특성을 고려한 노지 스마트팜과 정밀농업 모델을 실증할 수 있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
  - 밭농업 주산지 중심으로 기술도입 기반조성 및 현장에서 검증된 패키지(기자재+서비스) 보급
  - 기초형(데이터 수집·분석, 자동최적관수) + 특화형(생육정보 자동측정, 에너지효율화 등) 구분
  - 시범단지 내 농업인 대상 교육·체험장 조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 친환경 기술 보급

### ■ 미생물 농자재 생산 및 보급

- (사업목적) 미생물 농자재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토양의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화학 비료·농약에 대한 의존도 저감에 기여
- (사업내용) 화학농자재를 보완·대체할 수 있는 미생물 농자재 보급 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상용화지원센터와 등록업체를 연계하여 지역의 친환경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생물 농자재 발굴 및 보급 지원
  - 정부는 미생물 자원에 대한 특성평가를 강화하여 사용 가능 미생물 발굴·확대, 업체의 제품등록을 통한 보급을 확대할 계획에 대응하여 추진

### ■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 및 보급

- (사업목적) 화학농약에 의존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 지역의 친환경농업 주요 작목인 벼와 과채류를 중심으로 핵심 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 모델 구축
- (사업내용) 주요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과 작목을 선정하여 연차별 실증 시험 진행, 교육·훈련과 연계한 기술 보급 추진
  - 친환경 방제 기술의 패키지형 보급 : 예찰(작부체계, 저항성 품종, 재배환경 관리), 방제(천적, 미생물제, 식물추출물, 물리적 방제, 유기농업자재), 방제(천적, 미생물제, 식물추출물, 물리적 방제, 유기농업자재)

## 3) 탄소중립 실천

### ■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 (사업목적)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
- (사업내용)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단가 : 중간 물떼기(15만원/ha), 논물 얇게 걸러대기(16만원/ha), 바이오차 투입(36.4만원/ha), 가을갈이(46만원/ha)
- 지원규모 : 농식품부 직불금 사업 확대로 사업량 증가추세('25년 2,829ha → 5,136)

###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

- (사업목적)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활성화를 통해 환경친화적 농업 활동 확산을 유도
  -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제60조·제66조, 농업식품기본법 제47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0-115호)
- (사업내용) 저탄소 농업기술에 대한 인증획득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작물보호제,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 등 인증 비용을 지원

## 3) 자원순환 체계

### ■ 농업부산물 자원화 및 영농폐기물 관리 강화

- (사업목적) 지역에서 발생한 농업부산물의 자원화와 자원순환 이용체계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
- (사업내용) 농업부산물 자원화 및 영농폐기물 마을 수거 거점시설 공동집하장 등 확충
  - 농업부산물(가축분 등)을 활용한 바이오차 등 농가 활용 지원
  - 폐비닐·폐농약 용기 등 수거·분리·처리 체계화를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시설 확충

### ■ 가축분뇨 자원화 및 경축순환 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자원화하여 악취·수질오염을 저감하고, 경종농가에 양질의 유기질 비료원을 공급하는 순환농업시스템 구축
  - 축산 → 자원화 → 경종 환원 체계를 정착시켜 지역 내 경축순환(순환농업) 생태계 강화

- 
- (사업내용)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장비, 경축순환농업 조직화 및 단지 조성 등 지원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운영 : 퇴비·액비 생산시설 개선(부숙도 관리, 교반·송풍, 저장조 등), 약취 저감 설비(탈취·차폐·살포관리) 등
    - 품질·안전 관리 : 퇴비 부숙도 관리, 액비 성분 분석 및 살포 기준 지도, 살포계획 수립 및 과다 살포 방지(토양검정 사업과 연계) 등
    - 경축순환 조직화 및 순환단지 조성 : 사료작물 재배, 퇴비·액비 환원, 친환경 생산 연계 모델

## 참 고 문 헌

### REFERENCE

---

- 교육부. (2023). 학교급식 실시현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2020~2024).
-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21-2025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2025). 2026-2030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안).
- 전라북도, (2021). 제5차 농업환경보전 실천 5개년 계획.
- 전북특별자치도, (2025). 제6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 회의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21-2025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2025). 2026-2030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안).
- 전라북도. (2021). 제5차 농업환경보전 실천 5개년 계획.
- 전북특별자치도. (2025). 제6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 회의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 조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조사.



정책연구 2026-03

## 친환경농업 정부정책 기반 대응 전략

---

발행인 | 최백렬

발행일 | 2026년 1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길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

ISBN 978-89-6612-635-4 953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 2026년도 주요 연구과제

### 기초연구

농촌 식품사막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소멸 분석 및 대응 전략: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관세탄력성 분석: 대미수출을 중심으로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실태조사  
전북형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 기획연구

전북자치도 맞춤형 메디컬 푸드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전북 Physical AI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략 연구  
전북형 기본사회 추진전략 연구

### 정책연구

기후변화 및 변화의 시대 농업분야 대응 방안  
전북형 수산업 특화 발전방안 연구  
전북 지역균형발전 권역 협의체 구성 및 공동사무 발굴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성과관리 방안 연구  
노화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방향 연구  
전북사랑도민증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농촌주민 역량 강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청년 정주형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형 농촌특화마을 클러스터 구축 연구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의 전략적 대응 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미식관광 활성화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환경영향평가 협의모델 개발  
전북 삼천리길 추진상황 점검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산불 예방 대책 및 대응체계 개선  
제5차 섬발전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전북도 대응 방안 연구  
익산미륵사지휴게소 고속도로 환승시설(EX-HUB) 타당성 검토  
전북자치도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기초 연구  
전북자치도 신중년 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육성사업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전북형 수출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전북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연구  
전북형 지역거점 창업도시 모델 개발  
전북과학기술원 기본방향 설정 연구  
피지컬AI 기반 첨단 모빌리티 산업 전환을 위한 전북형 모델 마련 방안  
전북형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모델 마련 방안  
전북자치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기본방향 연구  
스마트농업 혁신 AX 거점 육성 전략 연구  
동물헬스케어 산업 발전 방안  
곤충산업의 그린바이오산업화 연계 발전방안 및 육성전략  
자치단체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방안 연구  
전북사랑도민증 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

### 현안연구

새만금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여건 기초조사  
통합돌봄 시행 대비 전북형 통합돌봄 지원 실행계획 수립  
전북체육역사기념관 설치 적합성 검토 연구  
새만금국제공항 사회적·경제적 효과 분석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연계 전북특별법 특례 추진방안 연구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http://www.jthink.kr)

